

토론회 순서

■ 행사취지 ■

- 행사취지 및 참가자 소개
- 노준서 _ 청소년기후활동가

■ 사 회 ■

- 박주희 _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 제 ■

- 이유진 _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기후정치바람(준)
- 이동학 _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박병규 _ 녹색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 조은구 _ 진보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패널토론 ■

- 이은경 _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 장종인 _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이진숙 _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 박옥희 _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김진덕 _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전)
- 최위환 _ 탄소중립마을너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장시정 _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

■ 종합토론 ■

〈청소년, 기후정책을 요구한다!〉

노준서 청소년기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후활동을 해온 노준서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활동가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기후위기로 우리나라의 저어새나 점박이 물범, 바다거북, 검독수리, 고니, 늑대, 대륙 사슴 등의 많은 동물이 멸종위기에 몰렸다는 걸 알게 되자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기후위기의 발생원인, 기후위기가 왜 위험한지 같은 내용의 여러 책과 기사, 영상 등을 찾아보며 인간의 지나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사용과 자원 낭비로 인해 기후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이 올라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다시 기온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해 알게 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정중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설마 우리 청소년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수많은 화석을 태우고, 편리하기 위해 지구를 더럽히고 각종 폐기물을 만들어내며 우리 인간은 대기는 물론 토양과 바다까지 오염시켰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해류로 이어져 있고 인천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까운 미래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월미도나 강화도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겠지요?

‘어쩌면 지구는 사람이 원인이 되어 기후위기라는 열병에 시달려 뜨거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병균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몸이 열로 대응하듯이 지구가 우리를 병균으로 인식하고 뜨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거대한 쓰나미, 엄청난 규모의 산불, 폭우는 물론, 폭설, 한파, 폭염 등.

이러한 재난들이 유래없이 자주 혹은 갑작스럽게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재난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재난이며, 기후재난의 주된 원인은 바로 사람의 활동이지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람의 활동으로 기후재난을 멈출 수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활동가로서, 청소년으로서, 예비 유권자로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하는 병균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현실성 없는 정책이 아닌, 진짜 기후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기후정책 토론회를 귀를 바짝 세우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인천의 기후유권자 분석



2024 기후총선
선거전략 LINE UP

기후정치바람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2024 기후총선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 22대 국회의원 임기 (2024.5~2028.5)
-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산업통상분야에서도 에너지 전환, 무역 규제 등의 이슈가 당면 과제로 등장
-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주의, 권력남용, 정치적 이합집산 등 '늙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 인구위기, 고령화와 같은 당면 과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 사회, 산업, 일자리, 불평등, 삶의 질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로 현 단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치 의제화':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으로 법과 제도, 예산, 인프라, 시민참여,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22대 국회임기(2024~2028년)까지 무슨 일이?

- 인구구성 : 2023년 출생아 수 22만7000명, 2030년 중위 연령 50세,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25.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정치일정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UN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 규제 강화	UNFCCC 1차 투명성보고서 플라스틱협약체결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UN 보고	UNFCCC 2차 투명성보고서		UNFCCC 3차 투명성보고서		UNFCCC 4차 투명성보고서 2030 NDC 목표 연도 메탄서약목표연도
국제 통상·경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중심으로 재편	CBAM 전환기간 미국 청정경쟁법 EU 배터리 탄소 발자국 공개 EU 해운 ETS	중국 에너지부문 배출피크 전망	CBAM 인증서 의무화	EU ETSII(건물과 도로 포함) EU 배터리 탄소발자국 상한선 초과 시 EU 판매 금지 IMO 선박 탄소부담금제도 실시			애플 공급망 탄소 중립 독일 전력믹스 중 재생에너지 80%, 영국 70%, 한국 21.6%
기업 기후공시 체계 구축	EU 유럽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 확정 시행 미국 SEC 기후공시 4월 확정 예정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안 3월 발표 예정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공식적용	한국 ESG 공시 제도 2026년 이후 도입 예정				
석탄발전소폐쇄 2030년까지 18기 폐쇄	11차 전기본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태안 1.2호기	삼천포 3.4 하동 1 보령 5.6	삼천포 5 하동 2.3	삼천포 6 태안 3 하동 4	태안 4 당진 1.2	당진 3.4

기후위기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 한국 정부가 제조업과 화석에너지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산업전환, 에너지전환을 늦춘다면 탄소규제에 따른 수출 산업 타격, 대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중소기업 충격, 노동자 실직 등 경제적인 충격 불가피
- 현재 수준의 대응으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달성 어려울 전망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집약배출량(2022)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A) 토대로 재구성

2023 기후위기 설문조사 구성 기후 유권자를 찾습니다

- 기후유권자는 누구인가?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를 고려하는 유권자
- 기후유권자 조작적 정의: 기후정보지수 3.8점 이상 & 기후민감도 지수 25.6점 이상 & 기후투표(정당) 의향을 가진 유권자
- 기후선거구는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 해당 지역의 기후유권자 특성 기반
전국/지역별 지표 질문에 대한 응답 비교 결과 / 기후재난에 대한 경험도, 다양성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도, 민감도
에너지, 산업전환, 일자리, 교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 지역을 대표하는 기후 쟁점에 대한 태도

기후위기 설문조사 문항 구성 8개 부문 172개

1. 선거 태도 및 정보 인자: 기후위기 관련 용어 및 표현 인지 등
2. 기후민감도: 개인경험 및 행동 참여 등
3.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판단: 본인의 자산 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
4. 기후위기 관련 정책 인식: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대한 찬반 등
5. 기후위기 대응 책임 및 평가: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관심 표현 방식 등
6. 지역 이슈 인식: 지역별 기후관련 인식 등
7. 행위 의지: 기후위기 대응 위한 비행기 이용 횟수 감축 의향 등
8. 정치행동 및 현안 인식: 종대재해처벌법 찬반 등

2024 기후홍보

11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설문조사 개요

조사 설계

-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남녀
- 목표 표본** : 17,000명 - 특별/광역시도별 1,000명
- 표본 오차** : $\pm 0.8\%$ 포인트(95% 신뢰수준)
- 표집 방법**
가중 방법 : 17개 광역시/도 1,000명 유의할당 후 각 광역 내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르는 할당추출(Proportionate Quota Sampling)
: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광역단체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조사 방법**
조사 기간 : 온라인패널(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에 이메일/문자로 웹 설문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의 웹 조사
: 2023년 12월 1일~27일(27일간)
- 조사 기관** : 메타보이스㈜

응답자 특성 (광역별 가중치 부여)

	전 체	사례수(명)	비율(%)
권역	서울	3,188	18.8
	인천/경기	5,430	31.9
	대전/세종/충청	1,818	10.7
	광주/전라	1,652	9.7
	대구/경북	1,644	9.7
	부산/울산/경남	2,536	14.9
	강원	514	3.0
연령대	제주	218	1.3
	18-29세	2,742	16.1
	30-39세	2,526	14.9
	40-49세	3,051	17.9
	50-59세	3,331	19.6
성별	60세 이상	5,350	31.5
	남성	8,423	49.5
	여성	8,577	50.5

2024 기후홍보

12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개요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6.2%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로는 인구 구성비에 따르는 할당추출(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조사방법	온라인패널(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에 이메일/문자로 웹 설문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의 웹 조사
가중방법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로는 가중치 부여(셀가중)
조사기간	2023년 12월 1~27일(27일간)
조사기관	메타보이스(주)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
권역별		
인천 1권역	265	26.5
인천 2권역	290	29.0
인천 3권역	245	24.5
인천 4권역	200	20.0
연령대별		
18~29세	162	16.2
30~39세	161	16.1
40~49세	187	18.7
50~59세	199	19.9
60세 이상	291	29.1
성별		
남성	498	49.8
여성	502	50.2

※ 1권역: 개항구, 부평구
 ※ 2권역: 남동구, 연수구
 ※ 3권역: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4권역: 서구

2024 기후홍보

12

기후정치비판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1. 기후위기 관련 용어 및 표현 인지

온실가스 > 탄소중립 > 탄소발자국 > 기후정의 > 파리협정 순

※ 다음은 귀하께서 기후위기 관련 용어나 표현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를 여쭙는 문항입니다. “알고 있다”는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

Q406 온실가스
 Q407 탄소발자국
 Q408 ESG
 Q409 RE100
 Q410 탄소국경조정제도
 Q411 파리협정 1.5°C 목표
 Q412 탄소중립
 Q413 기후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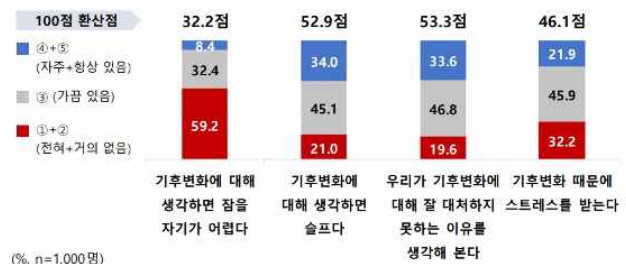


4.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인지/정서 장애 종합

“슬프다”와 “잘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본다” 대응

※ 다음 문항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진술문에 포함되는 경험을 귀하께서 얼마나 했는지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가끔 있음', 4. '자주 있음', 5. '거의 항상'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Q401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잠을 자기가 어렵다.
 Q402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다.
 Q403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Q404 기후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024 기후홍보

12

기후정치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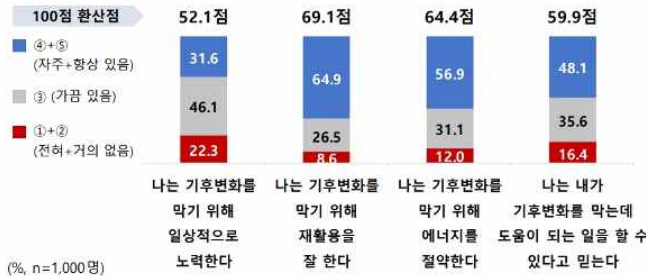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7. 지난 6개월 기후 민감도: 행동참여 종합

5명 중 3명 이상, '기후변화 막기 위한 재활용 참여' 응답

※ 다음 문항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진술문에 포함되는 경험을 귀하께서 얼마나 했는지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가끔 있음', 4. '자주 있음', 5. '거의 항상'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한다.

QB11.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활용을 잘한다.
QB12.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QB13. 나는 내가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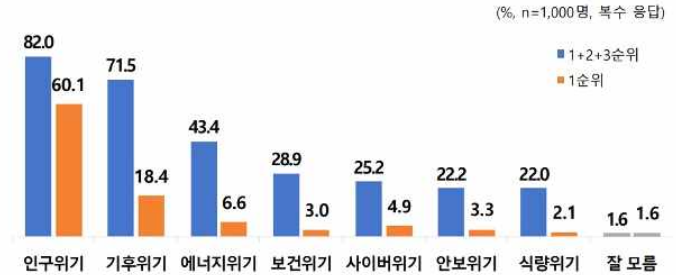
2024 기후홍선

12

4. 7개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 가장 심각한 위기: 1+2+3순위

'인구위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

QC03. 귀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아래 7개의 사회적 도전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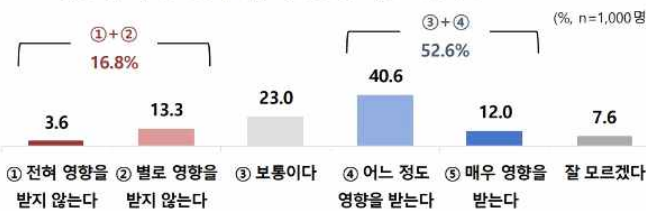
기후정치비망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6. 귀하의 자산 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절반가량, "영향 받는다" 응답

QC05.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산(주식 등 금융자산 및 토지·주택 등 부동산자산) 가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4 기후홍선

12

7. 국내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1+2순위

농업, 어업, 임업 > 에너지산업 > 관광, 요식, 숙박업 順

QC0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크게 받는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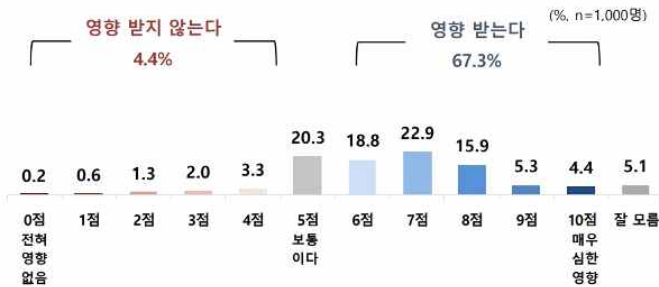
기후정치비망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8.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3명 중 2명, "영향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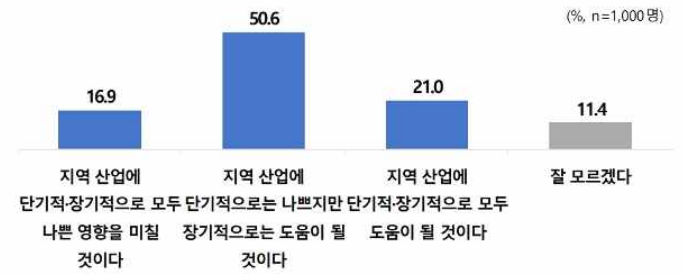
QC07.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혹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심한 영향을 받는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9. 탄소중립 정책이 거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평가

절반가량, "장기적으로는 도움 될 것" 응답

QC08.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주장 중 무엇에 더 동의하십니까?



2024 기후홍보

12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10. 기후위기 극복 정책이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

5명 중 2명, "증가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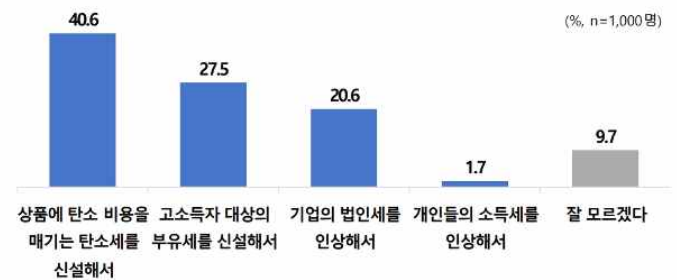
QC09. 귀하께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정책이 일자리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마련 방법

5명 중 2명, '탄소세 신설' 응답

QC10.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지금 살고 계신 광역시·도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혹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심한 영향을 받는다' 10점까지의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2024 기후홍보

12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12.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제안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C11.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귀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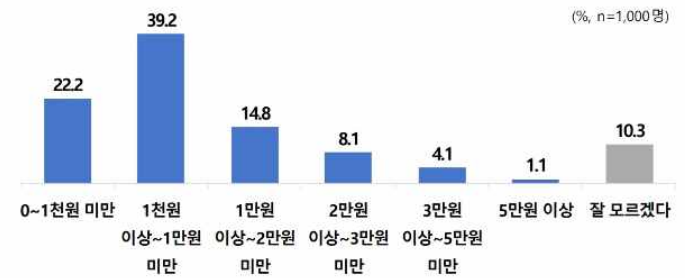
2024 기후홍선

12

13. 기후위기 대응 자원 마련을 위해 매달 추가 지불 가능한 금액

5명 중 2명 가까이, '1천원 이상~1만원 미만' 응답

QC12.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면, 귀하께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

5명 중 3명 가까이, '재생 에너지 확대' 응답

QD01. 정부는 전력생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원전확충, 재생에너지 확충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정책 중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 기후홍선

12

2.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 권고'에 대한 인지 여부

3명 중 2명 가까이, '비인지'

QD02.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선진국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3. 정부의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 계획' 인지 여부

5명 중 4명, '비인지'

QD03.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총 60여기의 석탄발전소 중에서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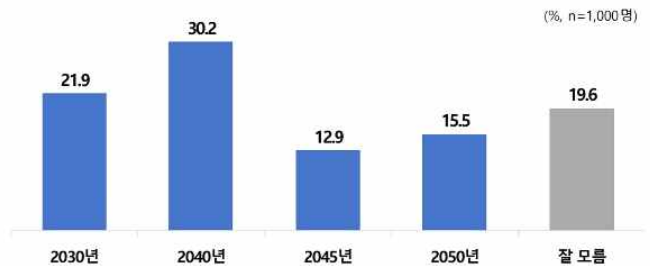
2024 기후홍선

12

4. 국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

'2040년' 응답이 가장 많아

QD04.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7조("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시점이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5.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D05.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스(LNG)발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발전도 석탄발전의 절반에 가까운(45.2%)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24 기후홍선

12

6.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계획 인지 여부

3명 중 2명, '비인지'

QD06. 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를 새로 건설하고,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7.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추진 계획 찬반

10명 중 3명, "신규 발전소 건설은 찬성,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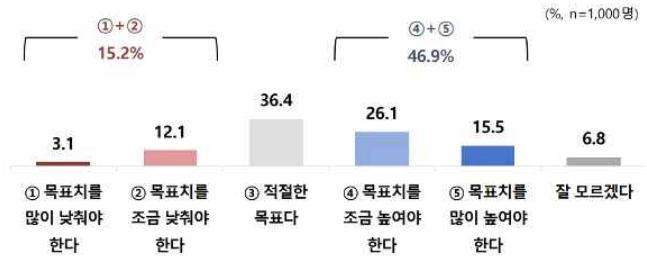
QD07. 귀하께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8.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에 대한 인식

2명 중 1명 가까이, "높여야 한다" 응답

QD08.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8.29%입니다. 같은 해 기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8.1%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1.6%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높여야 한다고, 혹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 기후홍보

12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11.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

2명 중 1명 가까이, "비싸다"

QD11. 귀하께서는 평소 사용하시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싸다고 혹은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단가 차등화 주장에 대한 찬반

10명 중 7명, "찬성한다"

QD13. 지역별 전력자급률(특정 지역이 스스로 사용할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율)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력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서울, 경기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단가를 책정하고, 자급률이 높은 지역(인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단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4 기후홍보

12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15. 국내 대형 주차장 내 태양광발전 설비 의무 설치에 대한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D15. 프랑스에서는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9. 국내 기업의 'RE100' 동참 중요성

10명 중 7명, "중요하다"

QD19. 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사용하는 'RE100' 약속이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 기후홍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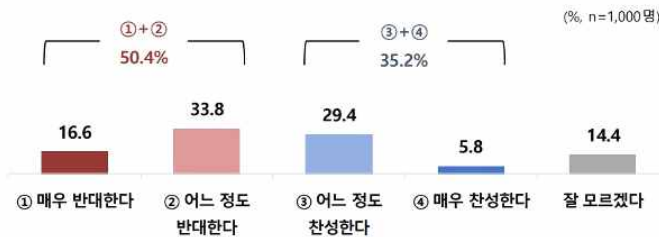
기후정치바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24.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종료 찬반

절반가량,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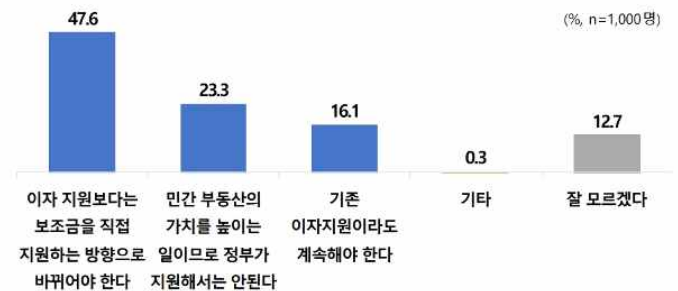
QD24.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을 할 때, 최대 3~4%의 저리로 이자를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을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종료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5.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개선 방향

절반가량, "보조금 직접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응답

QD25.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 기후홍선

12

기후정치바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26.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및 차량등록 제한에 대한 찬반

5명 중 3명 가까이, “찬성한다”

QD26. 우리나라에는 총 2,587만대의 차량이 등록(2023년)되어 있어, 총인구 2명 중 1명이 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적정대수를 정하고 차량등록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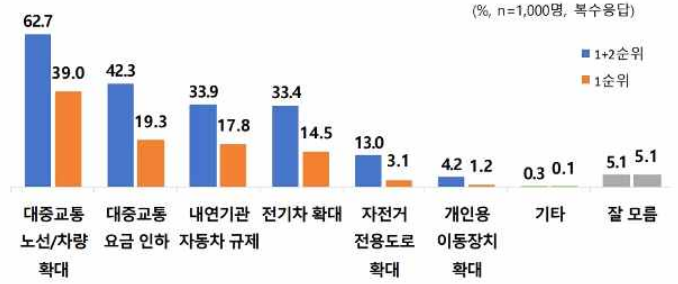
2024 기후홍선

12

29.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 1+2순위

“대중교통 노선과 차량의 확대” 응답 가장 많아

QD29. 귀하께서는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31. 자동차 무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정책에 대한 찬반

5명 중 4명 가까이, “찬성한다”

QD31.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이용자에게도 인센티브(자동차 무소유자에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24 기후홍선

12

32.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주장에 대한 찬반

5명 중 3명, “찬성한다”

QD32.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휘발유차, 경유차)의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앙스테르담의 경우 2030년에 내연기관차중지의 운행금지일 예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33. 정부의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에 대한 동의

5명 중 4명, “공감한다”

QD33. 귀하께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림축산 분야의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2024 기후홍보선

12

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어야 하는 정책 1+2순위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 추진”과 “국내생산 농작물 보호” 응답 많아

QD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뒀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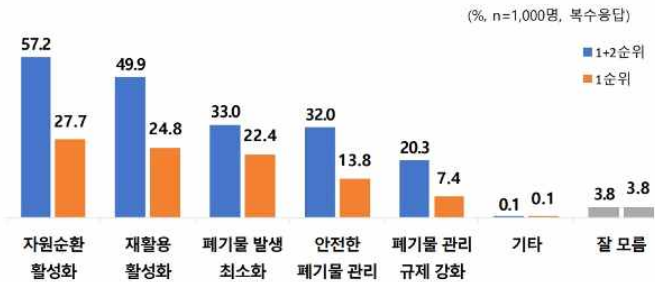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36. 정부가 우선해야 하는 폐기물 관련 정책: 1+2순위

“자원순환 체계구축을 통한 자연순환 활성화” 응답 가장 많아

QD36. 귀하는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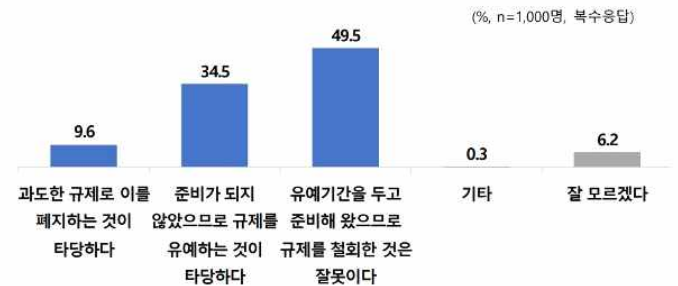
2024 기후홍보선

12

37.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에 대한 의견

절반가량, “규제를 철회한 것은 잘못이다”

QD37. 2023년 11월 환경부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감축하겠다고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1. (인천)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F05.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021년 충남·전남북 일대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한국의 갯벌'로 등재하면서, 2024년까지 인천·경기 갯벌도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갯벌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매립 등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24 기후홍보

12

2. (인천) 용진군 석탄발전소 운영 의견

'2035년 정도 폐지'와 '2030년 정도 폐지' 응답 대등

QF06. 용진군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진군 석탄발전소의 수명은 2044년까지입니다. 향후 용진군 석탄발전소 운영을 다음 중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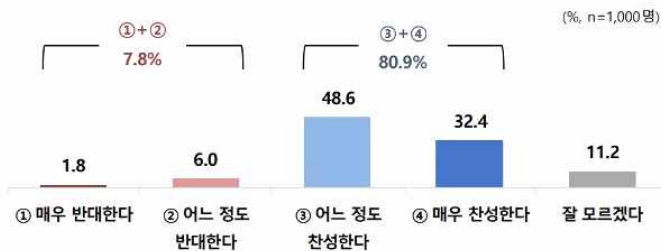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3. (인천)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 추진에 대한 찬반

5명 중 4명, "찬성한다"

QF07. 현재 인천 앞바다에 3건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24 기후홍보

12

1. 후보 공약 중 가장 관심이 큰 분야: 1+2+3순위

"경제 활성화" 응답이 가장 많아

QA01. 귀하께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의 다음 공약 분야 중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후보 지지를 결정하시겠습니까? 관심이 큰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2024 기후홍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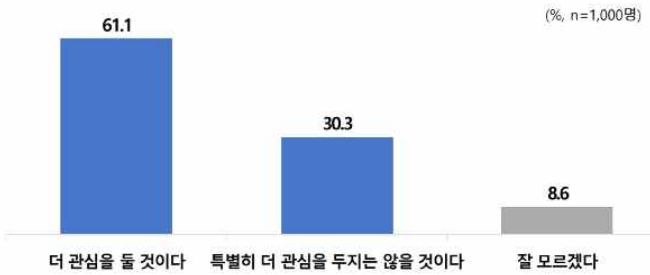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2.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대한 태도

5명 중 3명, “더 관심을 둘 것이다”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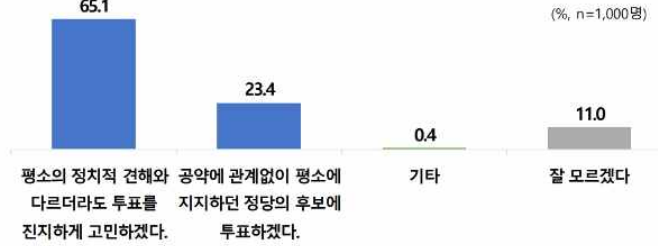
QA02. 귀하께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실 것 같습니까?



4.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한 태도

10명 중 7명,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

QA04. 귀하께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2024년 총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4 기후총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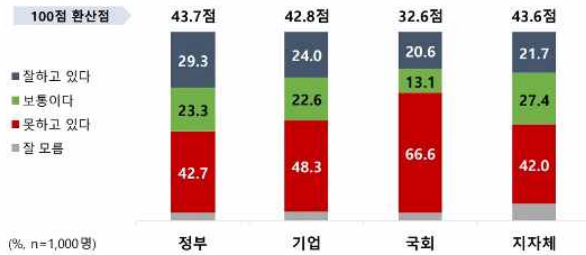
기후정치비람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 결과

8. 기후위기 대응 평가(중함)

정부 > 기업 > 지자체 > 국회 순

QE03. 귀하께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E04. 귀하께서는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E05. 귀하께서는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E07. 기후위기 대응을 귀하가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국내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이 아닌 이유

절반가량,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라고 응답

QE08. OECD에 속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기후위기 문제가 주된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귀하께서는 그 이유가 다음 중 무엇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 기후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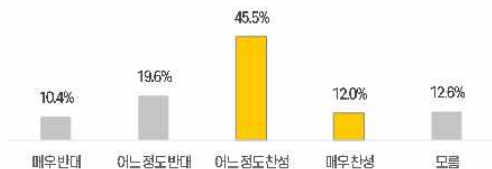
12

기후정치비람

대한민국의 지역별 기후 이슈 특징

‘수도권 집중 – 지역소멸’이 기후이슈에도 강한 영향

- 에너지의 생산-소비 지역간 갈등 강화
(에너지 자립도, 차등 요금제 등)



- 찬성 합계 전국평균 57.5%, 수도권 51.0% vs 비수도권 64.2% (강도도 차이)
-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간 격차 (지방소멸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해, 지방은 반기후산업이라도 유치 원해)

2024 기후총선

-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청, 제주 등 내연기관차 판매중단과 더불어 대중교통 확대에 대한 투자 원해
- 지방의 기후위기 인식, 체감도 높아(기후재난, 산업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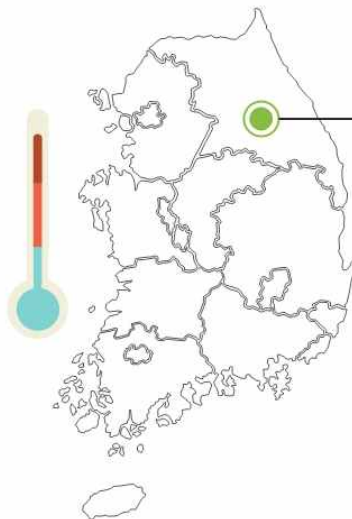


- 전국 공통으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 매우 높아
-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기후 정책들은 탄소세,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자원 재활용 강화 등

51

기후정치비망

기후선거구 어떻게 선정했나



선정기준



해당 지역의 기후유권자 특성 기반

- 전국별/지역별 지표 질문에 대한 응답 비교 결과
- 기후재난에 대한 경험도, 다양성
-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도, 민감도
- 에너지, 산업전환, 일자리, 교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 지역을 대표하는 기후 쟁점에 대한 태도

유의(절대적 지표 아닌 상대적 지표)

- 지역구 감안 (기존 선거 경향 참조)
- 전국기준보다는 권역내 상대적 경향성 우선
- 오차범위 이상의 격차 우선

2024 기후총선

50

기후정치비망

17개 시도 인천



기후 위기 극복정책이
일자리에 미칠 긍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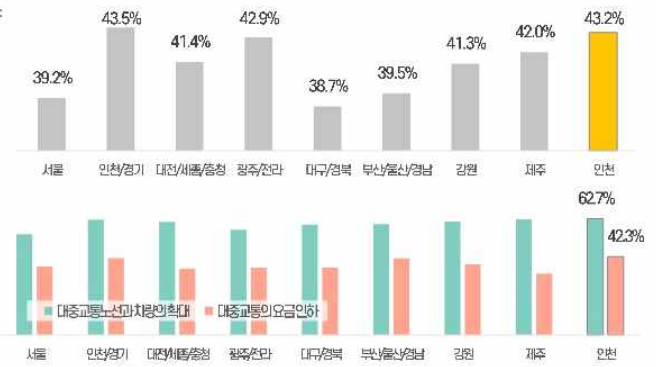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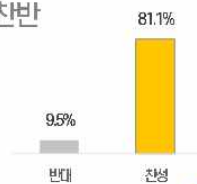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기대 커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

대중교통 확대와 요금인하에
대한 요구 커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록 찬반

세계자연유산등록에
전 지역, 세대에서 높은 지지



옹진 석탄발전소
폐지의견
2035, 2030년
순으로 폐지
의견 많아



2024 기후홍보선

72

기후정치비망

17개 시도 인천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대응 동참 + 대중교통 확충

옹진 석탄발전소 운영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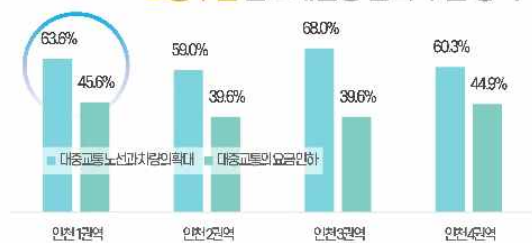
공공요금에
탄소배출 비용 부과 찬성



지역 전력자금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 찬성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우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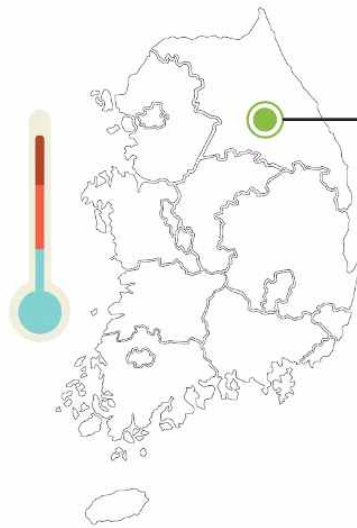


2024 기후홍보선

73

기후정치비망

기후선거구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선정기준



해당 지역의 기후유권자 특성 기반

- 전국별/지역별 지표 질문에 대한 응답 비교 결과
- 기후재난에 대한 경험도, 다양성
-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도, 민감도
- 에너지, 산업전환, 일자리, 교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 지역을 대표하는 기후 쟁점에 대한 태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 성별 / 연령 / 직종 등 특성
- 어떤 이슈에 누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가?

33

17개 시도 인천 계양구 부평구

공공요금에 탄소배출 비용 부과 찬성



지역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 찬성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우선 정책



34

인천 계양구 부평구

공공요금에
탄소배출 비용 부과 찬성

가구 자산별 찬성 비율



성별, 세대, 직업, 가구원 수, 가구소득, 정당지지율 등에서 두드러진 차이 없어
-> 자산에 따른 응답만 일관성 나타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높이는 데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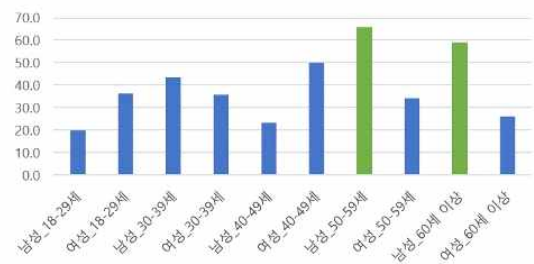
성별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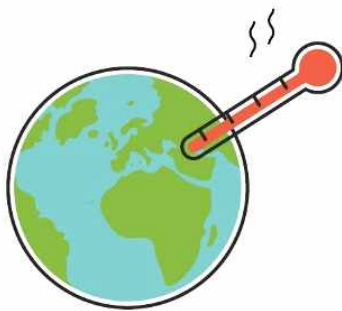


성별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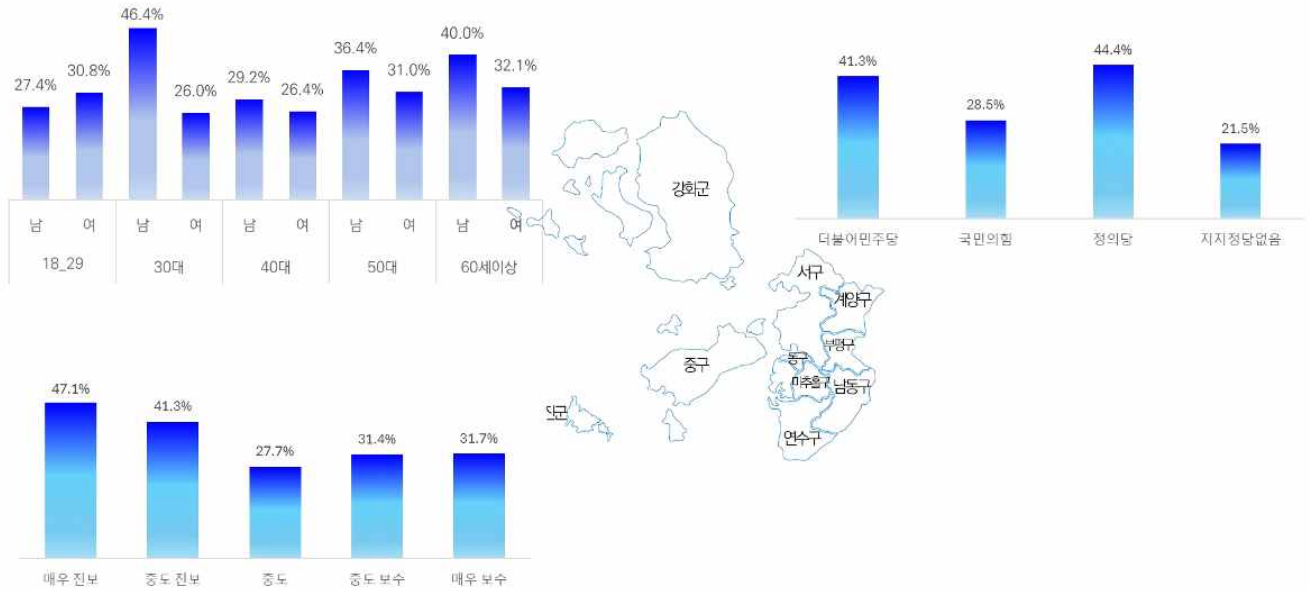


기후정치바람

인천 기후유권자? 격전지는 어디?



인천_기후 유권자는 누구?



인천_기후 유권자는 어떤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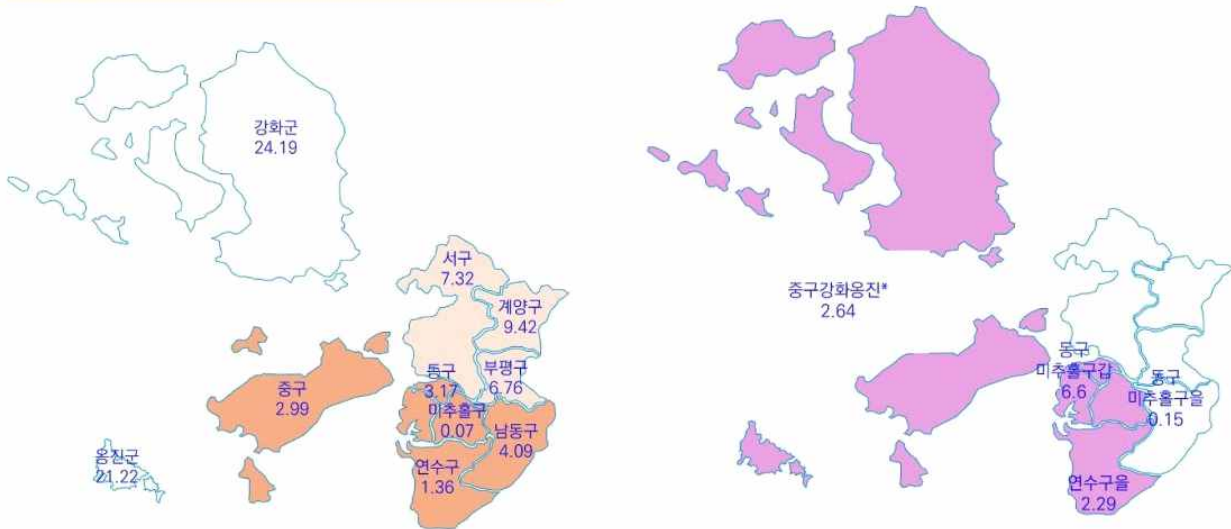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방안



주요 정책에 대한 태도



인천_2020 선거 격전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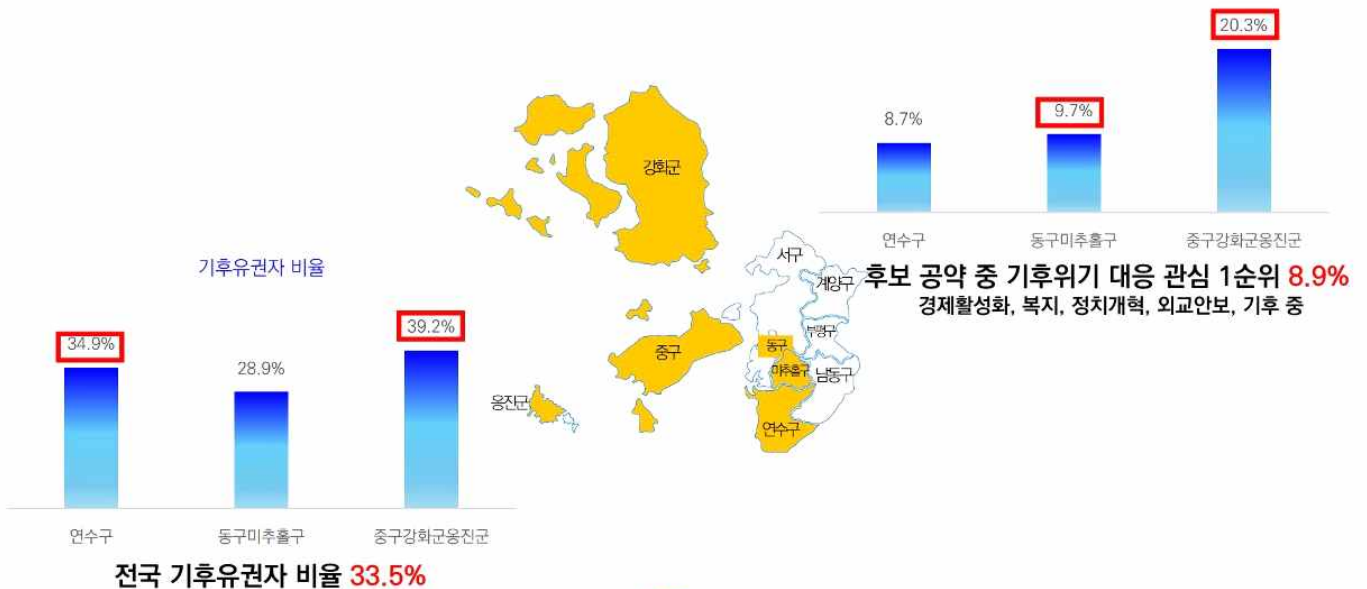


*[중구강화군웅진군] 선거구 전체 1위_2위 후보 득표차는 2.64%
중구 득표차는 12.56, 강화군은 23.95, 웅진군은 18.24

39

인천_2020 선거 격전지_기후유권자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가장 관심 있다



40

‘2024’ 총선 기후정책 방향 – 기후공약은 생활공약

- 탄소중립 목표 국가가 **언제까지 연탄난방?** – 연탄 기부가 아니라 난방연료에서 ‘연탄퇴출’, 주택 개선 정책 마련해야
- 재개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 **폭염과 한파, 홍수에 안전한 주택공급**(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기후위기)
- 버스가 없어 읍내 가기도 어려운데 **공항 건설?** – 무궁화호, 시외버스, 공공버스 바로 **내 곁의 저렴한 교통수단**



2022년 일가족 3명이 집안에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
경향신문 : ‘코드A’ 접수에도 관악구 반지하 출동 늦었던 경찰-소방 : 2022.08.11

반지하 거주 인구는 59만 9천 명. 서울 35만 5천 명. 특징 고령층, 1인 가구, 그리고 장애인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9330>

노선	지	간격	노선	지	간격
7:20			8:00		
09:55			8:50		
11:55			9:10		
12:55					
2:55			11:20		
3:55			12:00		
7:55			2:25		
8:10			2:50		
10:10			6:11		
11:10			6:50		
12:10			9:10		
4:10			8:10		
5:10					
7:10					

버스편이 줄어든 과천시외버스터미널 시간표
<https://www.walkview.co.kr/m/6088>



버스터미널이 사라진다
2023. 1월 17일 JTV전주방송 8뉴스



농어촌 버스터미널 점점 사라진다. 서울신문

‘2024’ 총선 기후정책 방향 –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와 생활비를 줄이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 '신재생에너지로 사업 다각화'
YTN 2024년 02월 24일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242217579477

KTV국민방송 · 2019.09.03.

태양광 덕분 공용전기료 제로...에너지 자립마을 가다

‘현장출’ > ‘아파트 통별로 현재 태양광이 발전되고 있는 양을 알 수 있어요.’ 한 달 걸릴지는 전기 요금이 3백 2십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용전기료 0 (Zero)’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관다 난간에 설치된...

메디컬투데이 · 2018.07.19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 한자리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의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전세대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아파트, 에너지절약과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공용전기 요금이 0원인 아파트, 전기요금으로 관리비를 절약해 경비원 고용을 안정시킨 상생 나눔을 실천한 아파트 등 좋은 사례...

대구일보 · 2018.05.01.

아파트 공용전기 0원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 성과

구미시 도량동 미소마을 아파트는 지난 2월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동했고, 태양광 요금 상계거래를 통해 공용전기 요금 0원을 달성했다. 태양광 요금 상계거래란, 태양광 발전설비가 낮에 발전한 전기를 공동부문에...

경남신문 · 2018.04.30.

창원 에너지스, 국내 첫 요금상계거래 태양광 공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태양광 설치 후 공용전기 요금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된 것에 대해 놀랐다’며 “7년 대여기간 이후의 전기세 절감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상계거래로 인한 여름철 전기 절감...



“보일러 들기 무서워” 전기장판으로 버틴 전셋집...주인한테 속았다 [지구, 미래기] 2024.02.20 허영드경제

설계 간단한 집 수리를 통해서 에너지는 50~60% 절감한 사례도 있다. 서울도시개발자문위에 의 2020년 주택에너지효율성사업에 통해 공복구 수유동에 위치한 1980년대 단독주택은 일대시 비용을 51만7000원 절감하기도 했다

특히 전열의 단열 및 창호 공사, 난방비만을 전담하는 공사 투입 한 번과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도 집 수리 전 356.7kWh에서 160.5kWh로 55.3% 절감한다.

기호일보 · 2023.06.29

안성시, 단독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사업 추진

기호일보 - 이들을 여는 신로 KHHOLBO 안성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접수 마감(지체로 인해 접수 불가)과 같은 지원금, 공사비, 다른 계약에 대해 가능하며...

안양시, 노후 단독주택 30호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침수 방지시설 공사 등

김두호 기자 · 2024.02.14 15:46

29일까지 신청, 최대 1천200만원 지원
최대로 시장 ‘실의 절 높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281>

'기후'와 '민생'을 담은 총선 7대 정책 제안



생태복지 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과 생활비를 줄이고
녹색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녹색조세 개혁 : 탄소세와 기후배당

탄소중립 산업과 생활정책 연계 : 에너지, 주택, 교통 녹색일 자리 만들자

2050 전 세계 최대시장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 공급

인구 정책·기후정책 :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
확대와 단계적 의무화

교통이 복지 :

버스 예산 국고보조와
교통위기 특별지역 지원

정의로운 전환: 농업 지원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산업 전환지원 마련

탄소중립 주무 부처 :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

1. 녹색조세 개혁 : 탄소세와 기후배당

■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

"상품에 탄소 비용을 매기는 탄소세 신설"이라는 응답 가장 많아

QC11. 국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귀하께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 중 무엇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지불 가능 월 금액

5명 중 2명, "1천 원 이상~1만 원 미만 지불 가능하다"라고 응답

QC13.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귀하께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약 제안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배당 실시. 탄소세 부과에 따라 화석에너지 소비가 줄고, 효율분야 산업 활성화
- 21대 국회에 탄소세법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은 채 법안 발의로 그침
- 탄소세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조세중립으로 기후배당 실시하면 조세 부담을 덜면서 시민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 구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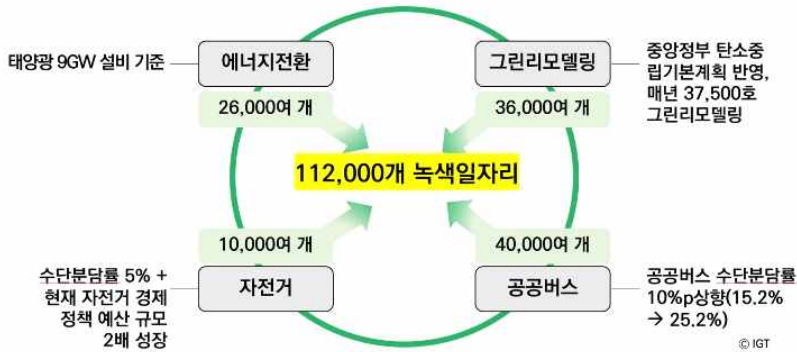
- 오스트리아 녹색조세개혁 2022년 10월부터 톤당 30유로 씩 탄소세 부과, 2025년까지 톤당 55유로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추가 인상
- 탄소세 부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상쇄시켜 주기 위해 기후보너스 지급(전 국민 대상으로 연 1회 2022년 1인당 500유로, 2023년 지역별 대상그룹 세분화 체계를 적용해 1인당 각각 110, 150, 185, 220유로 지급)

참고자료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연월일 : 2021. 3. 12.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01-24 <2024년 오스트리아, 이렇게 달라진다>

2. 탄소중립 산업과 생활정책 연계 : 에너지, 주택, 교통 녹색일자리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만 실행해도 **신재생 연간 6GW 이상, 리모델링 연간 21만 건**

2030년도 경기도민 11만 개 녹색일자리 창출



참고자료 :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일자리 보고서(2023)

■ **공약 제언** : 2050년 재생에너지 70% : 지역사회가 태양광, 풍력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제62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를 이행할 근거법이 없으므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녹색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전부 개정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환하거나 '기후산업진흥법'을 제정
- 지속가능공공조달 의무화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하여 녹색투자만을 전담하는 '녹색금융공사' 설립, 녹색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 제정

45

3. 2050 전 세계 최대시장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

청정에너지 전환 가장 바람직한 정책 : 5명 중 3명 가까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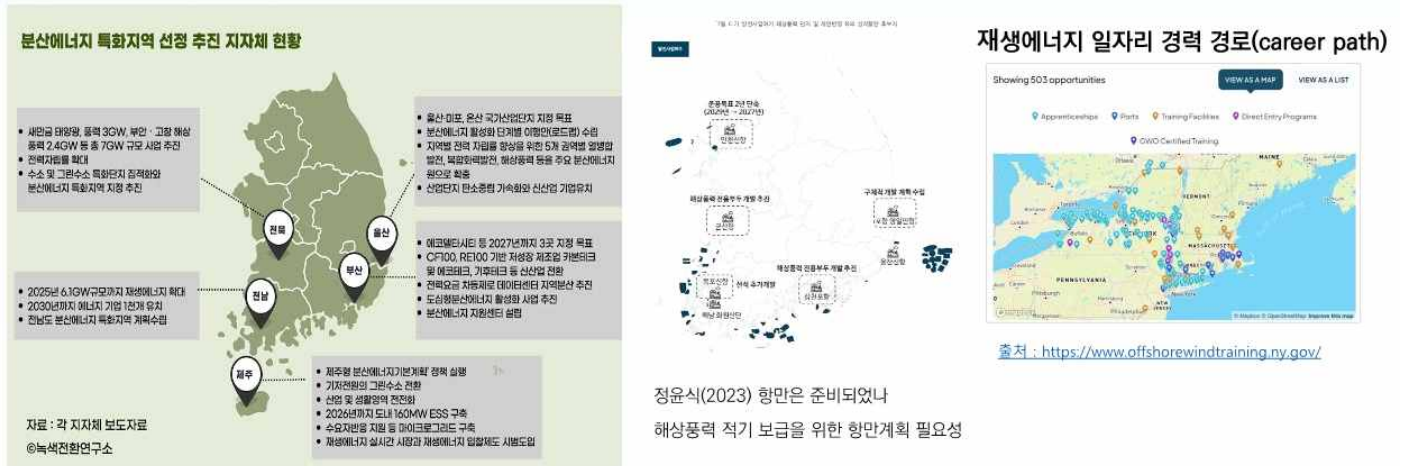
■ **공약 제언** : 2050년 재생에너지 70% : 지역사회가 태양광, 풍력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 지역에너지공사, 탄소중립에너지센터 설립(100억)
- 도시 지붕을 활용한 1가구 1태양광 지원정책 : 공공시설과 대형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건물 자가용(지붕형) 태양광(최소 43GW 잠재량 존재)
- 재생에너지 일자리 경로 지도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스마트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확대,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사업, 기후활동수당, 기후교육센터 설립

· NREL(2022) 자료 참고 IGT 재작성

3. 2050 전 세계 최대시장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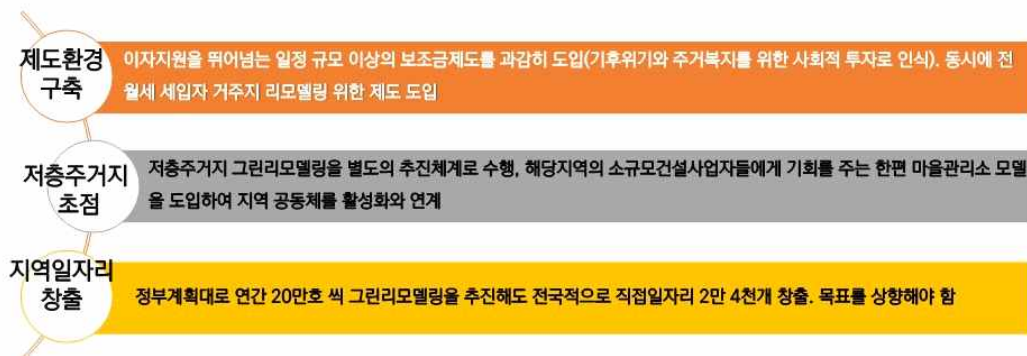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수출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배후 산단- 항만, 재처리, 석탄발전소 퇴출을 통해 탈화석연료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경로)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4.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 공급 : 대규모 주택효율화

폭염과 한파, 홍수와 산불에 안전한 집 :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 공약 제안

- 기후위기 시대 적정 주거기준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
- **마을 관리소 결합 그린리모델링** : 서울시 가꿈 주택 사업처럼 그린 리모델링 직접 보조금 지원, 그린리모델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반영
- 연탄 - 등유 - 가스 - 지역난방 - 히트펌프 등 난방연료 탈탄소화 로드맵과 지원 방안 마련

5. 교통이 복지 : 버스 예산 국고보조와 교통위기 특별지역 지원

공항보다 더 시급한 건 당장 시내에 나갈 버스

■ (29)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 1+2순위

“대중교통 노선과 차량의 확대” 응답이 가장 많아

QD29. 귀하께서는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32)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 주장에 대한 찬반

3명 중 2명 가까이, “찬성한다”

QD32.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휘발유차, 경유차)의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알스텍의 경우 2030년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운행금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공약 제언

- 버스예산 국고보조(중앙부처 입법 및 예산 확보-현재 유류비 외 국고 보조 근거 없음)와 단계별 버스 공영제, 공공교통 예산 2배 확대
- 버스 예산 국고 보조 확보를 통해 단계적 ‘무상버스’, 코로나19로 교통취약 지역 발생 특별지원, 청년산업단지 교통 대책 수립
- 공공 버스 도입으로 노선권 확보 및 노선 확충 (민영제 지역에서는 노선권이 버스회사에 있음)- 전남, 충남 등 버스 회사 1곳이 운영하는 지역은 버스 공영제를 통해 노선권을 확보하고 무상버스로 전환할 좋은 기회
- 전기버스 2030년까지 100% (2022년 11%)
- 교통공사 신설과 확대 대중교통 기금조성 (지방세, 교통시설특별회계, 기초 지자체 보조금 확대)

5. 교통이 복지 : 버스 예산 국고보조와 교통위기 특별지역 지원

교통전환은 에너지전환과 함께

전국 버스공영제 및 무상버스 현황



전국 친환경버스 도입률 (2022년 기준, %)



전기버스로 전환할 경우, 연료비 절감 효과
- CNG 버스 대비 41%, 경유 대비 48%

6. 정의로운 전환: 농업 지원·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산업 전환지원 마련

Ⅱ (7) 국내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1+2순위

농업, 어업, 임업) 에너지산업) 관광, 요식, 숙박업) 순

Q007.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크게 받는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Ⅱ (3)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 단계적 폐쇄 계획 인지 여부

5명 중 4명 가까이, 비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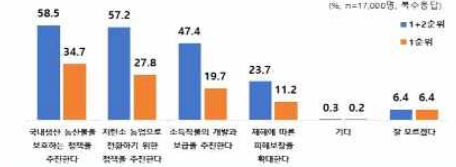
Q003.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총 60여 개의 석탄발전소 중에서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Ⅱ (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점 정책: 1+2순위

"국내생산 농산물 보호"와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 추진" 응답 많아

Q034.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공약 제언

- 국내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산업, 관광 숙박업, 제조업 순으로 인식. 실제 농업과 석탄발전소 폐쇄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침
- 정의로운 전환 3대 패키지로 석탄발전소, 자동차, 농업 분야 정책 필요
- 석탄: 2030년까지 6년 동안 18기 석탄발전소 폐쇄,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지역별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과 노동자, 지역주민 참여
- 농업: 국민의 5명 중 4명이 기후위기 농업 지원 동의, 국내 생산 농산물 보호 정책과 저탄소 농업 전환 정책 지원
- 자동차 산업: 전기차 확대에 인한 주유소, 자동차 정비 부문의 전환 대책 마련과 지원

7. 탄소중립 주무 부처: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

■ 공약 제언

-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정책이 되려면, 기획재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관할하고, 그에 맞게 정책과 예산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함.
- 자본시장연구원 2030년까지 탄소감축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를 300조 원 정도로 예측, 산업은행은 비공식적으로 450조 원 예측
- 기획재정부에서 탄소세와 기후배당, 기후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전기요금과 에너지요금 개혁을 주도해서 진행해야 함
-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총괄 운용하지만, 사업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14)에서 담당. 사업성과관리하는 사업수행 부처에서 부처별 목표와 비전, 고유 성과지표에 따라 이전처럼 평가 이행.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를 하면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오형나(2022.12)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9JMDGD6>

■ 구현 사례

- 독일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부총리) 신설: 독일 경제 시스템을 재정의, 하베크 장관" 탄소 중립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거대한 전환 프로젝트"라며 "구산업과 신산업의 구조,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 얻게 될 기회 등 급작한 변화가 잇따른다"
- 네덜란드 경제기후부: 재무부 별도 존재



기후유권자 운동 - 정당과 후보자는 응답하라 2024 기후총선!

'기후정치바람'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 총선부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매년 대규모의 기후위기 인식조사, 선거캠페인, 일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기후유권자 온라인 캠페인

- ① 스티커 [나는 기후유권자입니다- 예시 차량,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등] 배포, 깃발 등 제작 / 프로필 바꾸기
- ② [기후유권자가 간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를 만나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 ③ [기후유권자 가이드북] 기후유권자가 선거기간에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시민들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 ④ 필수 공약(키워드) 해시태그 SNS캠페인 예) #기후유권자 #기후총선

출처 : 기후정치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전국 보고서 <https://localenergy.or.kr/forum/view/1001426>
광역지자체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17개 광역시도 보고서 (17종) <https://localenergy.or.kr/forum/view/1001536>

나는 기후유권자입니다



[발제 2]

2024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약 발제

이동학 전 인천 중구(영종)강화옹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1. 기후테크 산업성장 지원법 제정

○ 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기후산업진흥법 제정

2. 정부 공공조달 시장에 기후테크 기업들의 진출 확대

① 기후테크 산업 투자 및 R&D 확대

- 기후테크 산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 및 확대
-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
- 기후금융 지원 강화

② 사업화 및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 혁신조달을 활용한 초기수요 견인
- 규제혁신을 통한 조속한 사업화 지원
- 기후테크 산업의 수출동력화 촉진

③ 기후테크 산업 성장기반 강화

-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분류체계 개편
-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확대

* 단순한 기후대응 아닌 산업으로 키워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3. 탄소중립 도시구축

○ 탄소중립 그린도시 100개 조성 사업 추진

- 전국 100개소(근린생활권)를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
- 선정된 100개소는 실질적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형 공간모델로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원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광역·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지원 및 네트워크화로 효과성 증대

4.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으로 지역 주도 에너지전환 추진

○ 에너지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

-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및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지역에너지센터 확대로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 지역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기 구축
-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수소클러스터 구축
- 수소융복합 슈퍼스테이션 기반 확대, 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 등 지원 품력발전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한국형 원스톱샵 도입
- 원스톱샵을 통해 계획 입지(국가 주도 입지발굴, 지자체 주도의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일괄 수행·처리
-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
- 전력 수요지 인근의 발전설비 및 도심형 분산전원 확대
- 분산형에너지 시장참여 유도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프로젝트 확대로 주민의 적극적 사업 참여 환경 조성
- 에너지협동조합 등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공급망 지원 확대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너지 바우처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

5. 에너지 고속도로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수송을 위한 송전설비 확충 및 전력 안정시스템 확보
- 세계기후변화당사국 총회28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배 확충 노력 약속
- 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
- ② 에너지 수요에 맞는 시나리오 설계 및 평가제도
- ③ 관련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책 시행(공공·민간 협력)

6. 지역에 맞는 에너지 활성화 및 녹색 일자리 창출

-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 생산과 수요를 공간과 지역으로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편익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존재 함
- ①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국가지원 가능토록 법률안 개정
- ② 지붕형 태양광 확대 지원책 마련(전기요금↓ 마을 조합 통한 소득 창출↑)
 - 예)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3개 시군, 126개 마을 신청(24년)

-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자들의 비리,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대안책 지원
- 지자체별 설치 수요 파악과 공급계획 시나리오 용역 시행
- ③ 어촌과 상생하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 체계 마련
 - 해상 풍력 등에 어업인의 참여 보장, 어업인 소득 확보형으로 상생 추진
 - 해양의 난개발 차단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해양환경평가로 일원화

*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은 5,479억kWh로 2013년 4,748억kWh 보다 15%증가

- 전체 전기사용량 대비 산업용 54%, 일반용 23%, 주택용 15%

7. 폭우와 폭설에 안전한 집 지원제도

- 최저 주거기준 법제화(재해, 재난, 기후 등 종합 진단 기준 마련)
- 최저기준 제시에 따른 주거기준 미달주택 전수조사(계획, 예산수립 지원)
- 패시브, 태양광 등 주택 손실전력량 절감, 단열 등 녹색일자리 창출

8. 자원순환 해양쓰레기 대처 방안

- 국민건강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
- ① 국가해양쓰레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각 주요 연안·도서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및 인력 완비
 - 해양쓰레기 집하장 300개소(현 100개소),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12개소(현 2개소), 해양환경지킴이 1,200명 운영, 정화운반선 12척 연안·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복구 지원 강화
 -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 확대
 - 침적 쓰레기 수거, 강하구 쓰레기 처리, 태풍 등 피해복구 지원 확대
 - 광역 해양환경위원회 설립으로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 지자체가 함께 해양환경 개선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원

9. 플라스틱 제로 사회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 플라스틱 원천 감량 추진
 -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원칙 수립
 - 경제성과 식품안전 등을 보완한 다회용기 스타트업 지원, 그린배송 인프라 구축
 -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일회용 포장재 및 플라스틱 사용 저감 유도
 - 공공부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중단 추진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세제 등 다회용기 가능 물품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재충전 설비 설치 및 리필 스테이션과 같은 포장재 없는 상점 확대
 -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 시 생산자책임재활용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녹색구매제도를 활용한 공공부문 재생원료·재활용제품 의무 구매율 도입 자원이용성 향상

- 용도·품목별로 재질·구조를 표준화하고, 일회용 포장재 재질 단일화 추진을 통해 분리 수거 효율 강화
- 친환경디자인규정(ECO Design Directive) 도입과 無라벨 제품의 생산 확대 지원
-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보장 확대 플라스틱 자원화 시장 활성화
- 식물 등 재생가능 자원으로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및 재 활용 기술 개발 지원 강화
- 플라스틱 대체 상품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플라스틱 자원화 관련 기술 R&D 투자 확대와 기업 상생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 유도

○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립

(수거) ‘공공책임과 시민중심’의 수거 체계로 개선

- 재활용폐기물 공공책임 수거 전환 지원
- 시민중심 공동체(공동주택, 업체, 지방정부 3자) 협정 제도화
- 공공비축 창고 등 재활용 안정 기반시설 확충

(처리)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 재활용품 품질 등급 관리
-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부담금 대체 요건 강화)
-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하는 직매립 금지 이행 지원체계 구축
- 환경친화형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주민 지원 인센티브 강화)
- 폐자원 인센티브 등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계획 수립

(혁신) 스마트하고 쾌적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 IoT 기반 센서, GPS, 빅데이터 등 스마트 폐기물 관리 관련 융복합 기술 지원 강화
- 단독주택 등 수거가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설치 지원
- 남은 식재료 및 음식물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스타트업 지원

10.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 정의로운 전환/ 소외와 배제되는 결정 아닌. 사회적 합의 과정
- 다음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확립
- 공론화체계 구축
- 정책 배심원제 확대

[발제 3]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기후정치, 녹색의 진보 정치

박병규 녹색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앞으로 1.5도 마지노선 깨지는 일 자주 발생할 것”

- 2023년 17일 세계기상기구(WM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66%에 달한다고 발표.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이는 영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소 한해는 1.5도를 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시적 상승폭에 한정된 예측”이라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1.5도를 넘어서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경보를 울리는 것”이라고 발표.
- 이를 증명하듯 지난 2월 8일 영국 BBC 방송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의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1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됐다고 보도.
- 호주 웨스턴호주대 말콤 맥컬러 교수팀은 지구온난화로 이미 산업혁명 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했다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2020년대 말에는 2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

2.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 2023년 대한민국 ‘12월의 봄’으로 불릴 정도로 이상기후를 겪었음. 이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고온, 폭설, 홍수 등 극단적 기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 호주 12월 평균기온보다 무려 15도가 높은 40도 기록. 독일 적설량 45cm로 역대 최고 기록. 러시아 145년 만에 찾아온 강설량.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동부 폭우와 홍수로 300명 이상 사망.
- 대한민국도 이러한 이상기후를 피해갈 수는 없음.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주관해 매년 발간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마철 기간은 54일(중부지방 기준)로 기상 관측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가장 길었고, 2022년 8월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침수된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 2023년 또한 관측 사상 한

해 전국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

3. 기후 위기와 죽음의 불평등

- 2021년 COP26 맞춰 발간한 옥스팜 보고서에서는 가장 부유한 상위 1% ‘섭씨 1.5도 탄소예산’의 30배, 상위 10%는 9배 넘는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
- 옥스팜의 기후정책 책임자 나프코테 다비(Nafkote Dabi)는 “억만장자의 단 한번의 우주 여행이 가난한 10억 인구의 평생 배출량을 초과할 것이다. 그들의 과도한 탄소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극한의 기후변화를 부추기고, 지구가 가열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위태롭게 한다. 가장 부유한 10%의 배출량만으로도 향후 9년 동안 합의된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이미 치명적인 폭풍, 가뭄 및 빈곤에 처해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
- 기후변화 유발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상태. 세계 인구의 20%이하인 선진국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의 약 10억 명이 겪고 있음.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 유엔 여성기구 마리아 홀츠버그 특보가 2020년 3월 BBC ‘코로나 19가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보도기사에서 한 말
- 이 말은 단순히 코로나라는 전염병, 그리고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임.
- 기후 위기와 같은 재난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닥치지만 피해는 차별적으로 발생.
- 부유한 사람들은 펀드나 보험을 통해 빠르게 리스크를 피하고 임시 용통이나 이주·재건축 비용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식량, 물,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보험은 자격 미달이거나 비용 때문에 가입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과 원인 제공을 하고있는 국가, 기업, 부유한 계급 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과 피해를 받지만 오히려 기후 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과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임.
- 즉, 기후 위기와 같은 재난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4.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해소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 3일 창당대회를 통해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면서,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성장주의에 기반한 대책, 실패가 입증된 시장주의적 해법이 아니라 오염자에 대한 책임 부과와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중의 삶과 생태적 한계선을 지키는 사회적 공공성의 확대 강화를 정책의 기준 삼았음.
- 그리고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총선 및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설정함.
 - ① 경제적 불평등과 탄소배출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 함께 전개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책임자 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강력한 누진적 조세체계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친시장적 국가재정 기조를 평등과 생태적 가치에 입각한 공공성을 확대 강화한 재정으로 재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 ② 불평등과 기후의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위기의 원인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는 시장주의적 해법과 기술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 ③ 기본권과 생태적 가치를 함께 지켜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생태적 한계선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생태적 한계선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한다.
 - ④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한계선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이 산업 전환 등 관련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인천에서 불평등과 기후 위기 극복 방안

- 앞서 언급한 녹색정의당의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원칙과 방향에 입각해 인천에서의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함.
-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전면 폐쇄하고,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노동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자체·협력업체·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구성 및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도입.
- 인천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친환경 공공교통 정책 추진. 이를 위해 ▲2030

년까지 마을버스, 일반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면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추진 ▲아동·청소년·어르신부터 단계적 무상교통 추진하고, 일반 성인은 교통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월 3만원 통합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탄소배출 절감(단계적으로 전 시민 확대로 완전공영제 실시) ▲2030년까지 인천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교체.

- 이 밖에도 ▲에너지복지법 제정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경인고속도로 완전 지하화 및 내항~상부구간 대규모 도시 숲 조성으로 도심지에서 탄소절감 추진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확충 방안으로 공동체 도시텃밭 확대와 공동체 공유부역 지원 ▲강화군·옹진군 생태농업 시범단지화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함.

[발제 4]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는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조은구 진보당인천시당 사무처장

‘탈원전이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던 윤석열 정부는 기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사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는 희망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태양광의 ‘태’자도 꺼내지 마라”며, 재생에너지를 죽이고 핵발전만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5만 명이 청원하여 막아내자던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는 총선 직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신공항 건설과 난개발을 “좋아 빠르게 가!”라며 온 국토를 헤집고, 기후생태 파괴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후정치가 부재한 사이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지하 수해 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산은 줄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는 가스민영화를, 전기료 폭탄에는 전기민영화를 시도합니다. 철도는 쪼개기 민영화, 돌봄은 민간위탁, 의료도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기후재난과 민생위기에 국민의 삶을 지켜주던 안전망이 하나둘씩 붕괴되는 만큼, 기업들은 돈벌이 기회를 챙기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반기후 폭정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제22대 국회를 기후정치 실현의 최전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기후 분야 3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기본권으로 물·전기·가스 전 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는 ‘요금’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선별적 에너지복지’는 난방비·전기료 폭탄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에너지 요금인상 또한 대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요금을 올려도 필수에너지는 줄일 수가 없고, 그만큼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반면 필수에너지가 ‘권리’가 되면, 에너지 절약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전기·가스 필수적인 에너지는 기본권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단, 누진제를 대폭 강화하여,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유층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도 없애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어 비싼 등유를 쓰는 농어촌 지역부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 공급 설비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냉난방 효율 개선,

임대인에게 주택 최저주거기준 유지·관리 의무 부과, 과도한 요금 방지를 위한 임차주택에 개별 계량기를 설치 등 주 거환경 개선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퇴출시키고, 공공 재생에너지가 대세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쓰는 화석연료를 조기 퇴출하지 못하면 1.5도는 커녕 2도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핵발 전 또한 핵폐기물 처리대책이 없고, 위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합니다.

탈석탄, 탈핵 사회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고, CCUS 기 술을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 일 자리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후일자리’를 보장하여 기후위기·지방소멸·고용위기에 맞서겠 습니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여 핵발전소를 조기 폐로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현재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또한 반 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대세로 만들겠습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발전 공사법’을 제정하여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민간협력업체들을 재공영화하는 등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그래 서 2050년 재생에너지 100%인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하고,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은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정책입니다. 특히 청소년 무상교통은 ‘교육 평등’의 의미까지 더해 1석 3조가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분담하 고, 학령인구 감소로 과잉 축적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이 ‘청소년부터 무상교통’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무상교통은 버스 완전공영제와 함께 가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를 민영제로 운영하는 OECD 유일 한 국가입니다. 노선소유권을 민간기업이 소유하다 보니, 적자 핑계로 필요한 노선을 감축하는 등 시민 이동권이 침해받았습니다. 대안이라던 ‘준공영제’ 또한 국민 세금으로 버스업체들 배불리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완전한 공영제가 결합되어야 진정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 교육의 접근성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마을버스부터 시작 하여 전국의 버스·지하철까지 단계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교통체계를 통합하고, 공공교통 중심의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시기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를 조금 늦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가 돌보는 세상.
화석연료가 아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세상.
기업돈벌이가 아닌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 시민들이 주도하는 세상.
기후정치시대, 진보당이 앞장서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22대 총선 기후공약] ‘기후정치 대전환 실현’

1.목표: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및 민중이 주도하는 기후정치 대전환

2. 기후 공약

①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법 개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기본권 보장
 - 재생에너지 전환 위한 지원 명시
 - 필수에너지량 무상공급 위한 필수량 산정
 - 에너지위원회에 이용자 및 노동자, 공급시설 주변주민, 지자체 참여
-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사업 공공성 확보 방향 명시
 - 산안부장관이 필수전기량 산정, 전기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산안부장관이 필수가스량 산정, 도시가스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수도법 개정
 - 수도 민간위탁 요건 강화
 - 환경부장관이 필수수도량 산정, 일반수도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주거기본법 개정
 - 최저주거기준에 한파·폭염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수준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 부과
 - 임차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계약시 알리지 않으면 차임 1/2 감액청구

② 화석연료·핵발전 퇴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보장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노조법 개정을 통한 산업별·업종별 협약 실현 등
-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핵발전소 조기 폐로
-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실현
- 발전공사법 제정,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및 민간협력업체 재공영화 추진

③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 추진

- 청소년 무상교통 전국적 실현
-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체계 통합, 공공교통 대전환

④ 신공항 건설 반대, 공공철도 강화

- 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 KTX-SRT철도 통합 공영화 실현
-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 KTX-SRT 통합, 수서발 KTX 도입,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⑤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

-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
- 세수의 활용이 '보편적 복지'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함.

⑥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와 뉴노멀 시대에 맞춰 안보의 개념 재설정
-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클러스터 조성
- 국방부문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공개및중장기적감축전략수
- 에어쇼 등 군사 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의 불필요한 행사부터 점진적 감축

⑦ 2030년 폐기물 50% 감축, 발생지 처리원칙 강화

- '생산-소비-관리-폐기/재생' 전 과정 순환관리시스템 구축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생산책임제 강화
- 폐기물 관련 업무 직영화
- 직매립 금지로 매립비율 최소화
-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⑧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 확대
-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토론 1]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기후변화와 사회정의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 기후변화는 각종 산업 부문 인간 활동을 통해 자연을 착취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임.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인천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 변화(1.8%)보다 인간 활동(93.3%)에 의한 것으로 인식됨. 특히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는 응답에서 여성(94.6%) 비율이 남성(91.9%)보다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를 통해 위기를 경험하는 것에는 성별 격차가 있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재난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체감하는 것은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증가한 국내 재난과 기후변화 관련 정도’에 있어서, “관련 있다”는 응답이 93.3%이며, 여성은 94.5%로 남성 92.1%에 비해 2.4%p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 간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중 ‘폭염’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70.3%), 여성(72.9%)이 남성(67.8%)보다 5.1%p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최근 6개월 간 기후변화 관련 인지/정서 장애’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4.0%), 여성 39.2%, 남성 28.7%로 여성이 10.5%p 높은 격차로 나타남.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활동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후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87.3%으로 여성(88.4%)이 남성(86.3%)보다 다소 높은 비율(2.1%p)로 그렇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막기 위한 재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여성(70.4%)이 남성(59.4%)보다 높은 비율 격차(11.0%p)로 참여한다고 응답함.
- 하지만 기후정의 이슈는 경제성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밀려나고 있으며, 안전과 돌봄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고 있음(젠더정의 관련).
 - ‘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2030년까지 14.6%→11.4%로 감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여성(57.6%)보다 남성(64.1%) 비율이 높음. 찬성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준비 부족”,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다른 부문 줄임이 바람직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 ‘어린이 안전통학로 내 속도제한 상향 조정(30km/h→40km/h)’에 대해 “찬성한다” 응답(62.3%)은 여성(56.3%)보다 남성(68.3%) 비율이 12.0%p 높게 나타남.
 - (돌봄) ‘카페, 식당 등에서 어린이 출입 금지하는 노키즈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58.7%)은 여성(53.9%)에 비해 남성(63.6%) 비율이 높고 9.7%p 격차가 나타남.

- 116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에서 인천여성연대(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회·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308명 인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여성주권자의 요구를 발표함

인천여성주권자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5대 요구

1.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을 원한다.
2. 우리는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타파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3.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4. 우리는 정직하게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5. 우리는 돌봄사회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 인천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여성의 경제참여율,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성비에서 최하위권으로 심각한 수준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평등 인식확산과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함.
- 성평등 민주주의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파괴를 거부하는 것임. 성평등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젠더정의는 기후 정의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젠더 이슈는 단편적이지 않고 구조적임. 성차별 및 성불평등 관련 부정의(injustice)는 경제, 문화, 정치, 법적인 사회구조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법적 처우, 정치적 대표 등 사회구조의 4차원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선거 공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컨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경제적 분배), 여성 안전과 돌봄 대응(문화적 인정), 유리천장 해소(정치적 대표), 성폭력 및 여성 혐오 처벌 법규(법적 처우) 등
 - 젠더정의와 기후정의를 반영하여 사회구조 4차원을 모두 반영하는 공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음
- 우리는 제22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사회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젠더정의와 기후정의를 모색하고 실현하기를 바램. 당선인의 선거 공약은 향후 국가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고문헌]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 2024. 기후정치: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인천보고서
 이은경. 2019.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성 주류화: 사회 정의 관점에서 성 주류화의 틀짜기. 정부학연구 25(3). 219~249쪽.
 인천여성연대. 2024. 116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장애인정책 요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장종인



세계인권선언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
는 **사회질서 및 국제질서**에서 살아
갈 권리가 있다.”



역사적 결정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 인권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하여 처음으로 의견표명 -
-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설정 등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체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기후위기와 장애인 인권

2020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기후변화는 다양한 인권적 측면을
저해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



반지하 '장애인 가족' 참사...남은 어머니는 대성통곡했다



고형준 기자 +구독

f t s o ★ 📷 가*

갑자기 불어난 물 피하지 못해
가족 중 1명은 지적장애인
동작구에서도 반지하 거주 50대 여성 숨져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대책 마련해야”



9일 오전 9시께 주민 전예성(52)씨가 지난 8일 밤 일가족 구조 시도 당시 차올라있던 물의 높이를 우산으로 가리키고 있다. 고형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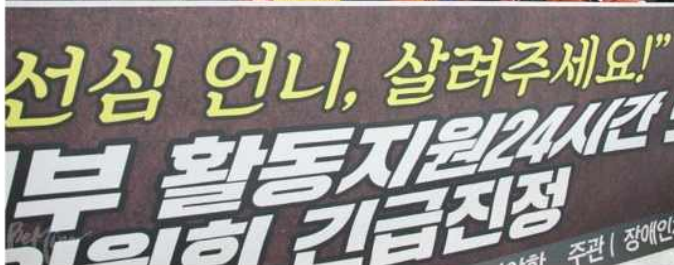
기후위기와 장애인 인권

40도 폭염에 선풍기 없는 방에 갇힌 사지마비 장애인 “살려주세요”

A 김혜민 기자 | © 연합뉴스 2018.08.07 09:51 | 댓글 0

🔍 🔄 가 가

활동지원사 퇴근 후, 폭염 속 12시간 동안 홀로...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장애계 “상시적 위험에 처해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들, 활동지원 24시간 지원해야”



폭염에 집 밖을 나돌 수 없는 김선심 씨를 대신해, 그가 다니고 있는 노동장애인아카데미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긴급 진정했다.

최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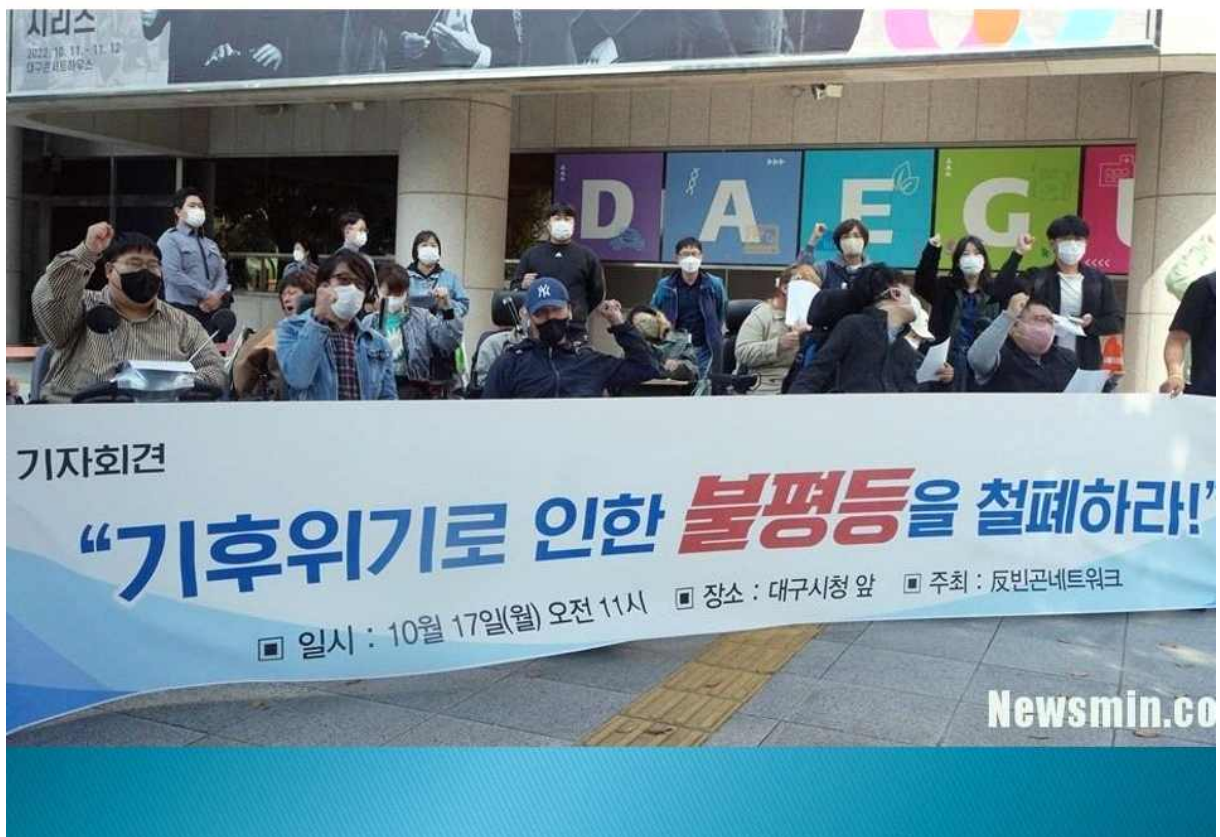
- 학연해설방송 편성안내(5월9일~5월15일)
- [무연고자 장례] 5월 13일(금) 김복환 님, 이...
- [무연고자 장례] 5월 12일(목) 이금사 님, 최...
- [무연고자 장례] 5월 11일(수) 김규철 님의 장...
- [무연고자 장례] 5월 11일(수) 전순성 님,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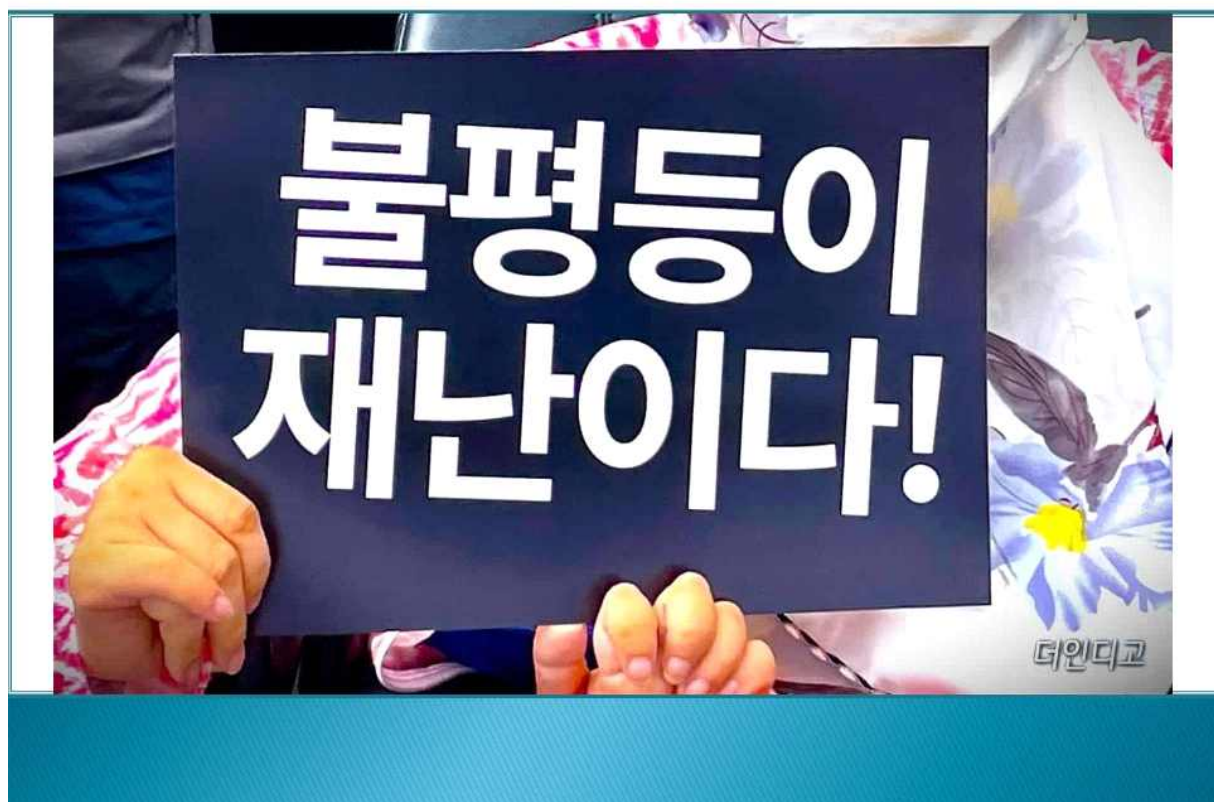
인기뉴스

- 01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점오테리'에 무함...
- 02 [전문] 박경석·이준석 JTBC 썰전라이브 ...
- 03 트위터 계정 정치와 관련한 비마이너의 ...
- 04 박경석, 지하철 시위로 경찰 출석 “장애...
- 05 [전문] 박경석·이준석 JTBC 썰전라이브 ...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 취약





재난과 장애인 인권

2016년 경주 지진

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
서쪽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재난과 장애인 인권

“지진이다!” ...장애인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강혜민 기자 | 입력 2016.09.20 20:00 | 댓글 0

한반도 사상 초유의 지진, 장애인 대피 매뉴얼이 없다
지진 발생 일주일, 여전히 정확한 정보 전달 없어



[현장] '울진 산불, 운 없으면 죽을 뻔' 장애인 지원 매뉴얼 아직도 없다

8일 오후 12시, 경북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만난 건 뿌연 하늘이었다. 미세먼지가 가득 낀 것 같았다. 산불을 진압하는 헬기가 연신 날아다녔다. 울진군 내 가장 큰 대피소인 울진국민체육센터 앞의 대기업이 보낸 구호물품과 자원봉사자들로 발

장애일반 하민지·이슬하 기자 | 2022.03.09 19:29



'국가 재난'이 된 강원도 화재... 그러나 불길 속에 방치된 장애인들

4일 밤, 강원도 속초·고성 화재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뒤늦게 뉴스 특보가 편성됐으나 공중파 3사인 KBS, MBC, SBS 어느 곳에서도 수어통역은 지원되지 않았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재난방

장애일반 강혜민 기자 | 2019.04.06 15:04



창원 재난대피소 315곳 중 '모든' 장애인 접근 가능한 곳은 '0'곳

창원시 내 재난대피소 315곳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 후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휠체어 접근성을 비롯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장애일반 강혜민 기자 | 2017.11.30 18:01



포항 지진, 그곳에 장애인도 있다... "여기가 무덤이구나, 생각했죠"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반도 지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에도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22일, 포항을 찾았다.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

장애일반 강혜민 기자 | 2017.11.29 11:19

재난과 장애인 인권

2021년 소방청 통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240명,
그 중 96명 사망
우리나라 10만명당 화재 사망자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9배 높아



재난과 장애인 인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본 전체
사망률 0.8%, 장애인 사망률 3.5%



등록 2020.02.24 12:11:24 | 수정 2020.02.24 12:24:32



A person wearing a full-body white protective suit, a face shield, and gloves is spraying a white disinfectant mist from a red nozzle. They are standing in a paved area in front of a large, multi-story pink building with green signage that reads '청도군민건강원' (Cheongdo City Hospital). A white car is parked nearby, and other vehicles and a person on a bicycle are visible in the background. The 'NEWSIS' logo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반인권적 상황이 만든 비극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장애인 관련 전담 지원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사 > 전체기사

[이슈&탐사] 중증장애인, 왼팔로만 버틴 11일의 자가격리

| 약자에 더 가혹한 재난 ① 사소한 일상이 공포가 됐다

입력 : 2020-03-06 04:03 / 수정 : 2020-04-06 17:19



3년째 외출 조차 못하는 감옥생활

‘걸핏하면 코호트 격리와 외출·외박·면회금지’… 대구도 긴급탈시설 촉구

By 조성민 - 2021년 1월 6일

0

“누구를 위해 가두나” 복지시설 코로나19 외출 통제 인권위 진정

조해람 기자

2021.07.21 17:15 입력 ▾

‘코호트 격리, 유엔에 판단 맡겨’… 신아원 사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접수

By 이호정 객원기자 - 2021년 1월 5일

0

뒤늦은 지원 정책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광역단체 절반, 격리 장애인 ‘24시간 돌봄’ 전무… 집중관리서도 제외

입력 2022.02.10 (21:28) | 수정 2022.02.10 (21:41)

해외 코로나19 사망자 절반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죽었다

최한별 | 입력 2020.12.11 21:08 | 수정 2020.12.11 21:21 | 댓글 0

[기획연재] 코로나시대, 싸우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 ⑨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들



청도대남병원에서 정신장애인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지난 2월 말, 전국장애안사발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망자들 애도하는 일곱 없는 연정사전 11개가 국가인권위원회 계단에 놓여있다. 그 앞에는 국회가 놓여있다. 사진 박승원

집단거주 형태 반인권적, 반의료적

기후위기로 인한 상시적인 팬데믹
위기의 시대 집단거주 형태는 장애
인 거주시설 반인권적, 반의료적

재난이 남긴 교훈 그러나...

정치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가계획 속 안전취약계층 포함...한국DPI '환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30 09:19

댓글 0

다운로드 인쇄 + 가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했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속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했다.

재난이 남긴 교훈 그러나...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 반영해 재난·안전관리 강화"

2017.09.24 12:00

가 0

| 행안부 등 9개 관계부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윤희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뉴스1

정부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해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난이 남긴 교훈 그러나...

'계단으로 잘 대피하라'는 휠체어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

※ 김현무 기자 | ① 입력 2023.02.13 16:10 | ② 수정 2023.02.13 16:51 | ③ 댓글 0

형식적 안내뿐인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
외국사례 보니 주거 공간에도 '리프트' 지원
국내 후진국형 제도, 장애인 사고율만 높아



성동 휠체어 / 캐시미어시명크

"긴급 긴급! 화재 발생! 건물에 있는 모든 인원은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아참! 휠체어 탄 장애인은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가세요!" 화재 발생 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계단을 이용하라'는 황당한 안전 대응 매뉴얼이다.

계단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가이드

재난 취약 특성에 따른 분류

유형	재난 취약특성	주요 대상	재난 지원
 이동의 어려움	재난 상황 발생 시 모든 이동이 제한	전신마비 장애인 및 노인, 혼자서 휠체어 등을 타지 못하는 장애인 및 노인	소방공무원의 우선 구조, 재난 상황 조력자 지정 및 조력자 대피교육, 건물 또는 인근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계단이동 어려움	휠체어를 타거나, 클러치를 잡고 이동하는 등의 수평 이동은 가능하나 계단 이용이 어려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클러치 이용 장애인 및 노인	건물의 대피 공간 확보, 계단이동 보조 장치, 소방공무원의 우선구조, 건물 또는 인근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음성을 통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구어장애가 있는 노인	재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재난 상황 전달, 진동 재난 상황 전달, 응급수어, 조력자 의사소통 지원
 의미 의사소통 어려움	추상적 단어, 어려운 단어, 복잡한 문장 등을 이해하기 어려움	발달장애인, 인지적 뇌손상이 있는 노인, 유아·아동	재난 상황 대피 지시, 재난 상황 인식교육, 관련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	눈으로 화재나 비상구를 인식하기 어려움	시각장애인, 시력이 나쁜 노인	대피 시 조력자와 함께 대피, 건물의 대피로 안내

재난이 남긴 교훈 그러나...

3. 호우

1) 비가 많이 올 때

- 사고발생시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릴 것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말 것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할 것
-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
-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둘 것
- 해안가에서는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 가까이 가지 말 것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방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둘 것

재난이 남긴 교훈 그러나...

국가의 장애인 재난대책은 '속수무책(束手無策)'

By 이종석 · 2022년 8월 16일

100

100 좋아요 56개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서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과 정신장애인이 잠안을 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 대책의 취약성이 노출됨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 마련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이종석, 왼쪽 사진: 이종석)



- 지난 8월 폭우로 사망자 5명 중 2명이 장애인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재난 시 사상자 많지만 대책 전무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도 대피방안 대신 교육과 호출장비 확대
- 장애인 취약 특성 적합한 대피계획 수립 위해 소방서 등 상시 관리 필요

재난이 남긴 교훈 그러나...

장애인은 재난 때 대피 어려운데...직장 58% "매뉴얼 없다"

이종석 기자 1 구독

f t y d s g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첫 실태조사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 차별 느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첫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 차별 느껴" (오른쪽 사진: 이종석, 왼쪽 사진: 이종석)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 장애인을 위한 정책요구



장애인을 위한 기후위기 정책

- 정당의 기후위기 정책, 탄소감축, 에너지 전환에 치중
- 모두가 안전한 주거정책
- 거주시설 완전폐지, 탈시설지원법 제정
-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재난, 의료 대응 시스템 구축
- 재난 대피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 저상전기버스 도입 의무화, 조기추진 로드맵

[토론 3]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2024 기후정책 (노동 분야)

이진숙(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1.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1)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노동운동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고 그에 적응하는 체제로 산업, 소비, 생활 등을 전환해 가는 과정이 필요.
-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총 전기사용량이 산업용 53%, 공공·상업용 32%, 가정용 14%로 구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이 모두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산업들.
- 따라서 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전환 문제가 중요한 이슈일 수 밖에 없음. 노동시장과 산업의 주요 주체로서 산업전환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운동의 고민.
-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산업의 변화, 특정 산업의 축소가 고용 불안, 실업, 전직, 노동조건 감화, 소득감소 등의 상황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에는 많은 진통이 따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는 잠재적 피해자이자 능동적 행위라는 이중의 위치.

2) 노동운동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 기후위기 대응 노조전략 유형

	반대(opposition)	울타리치기(hedging)	지지(support)
내용	탄소배출 감축 정책 채택의 필요성 거부	기후변화 완화 필요성 부정 하지 않으나 규제 최소화 추구	기후변화 완화 정책지지 및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법 채택
해외사례	폴란드 석탄광부노조, 자국 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강 한 의존 옹호, 높은 조직률 로 노동운동에 매우 큰 영 향력. 국제노총(ITUC)과의 갈등	철강 등 제조업 부문 유럽 노조 주된 선택 전략. 영국 UNITE, 독일 IG-Metal, IG-BCH, 캐나다 USW, 프 랑스 Cfdt 등 고용문제에 관련 심을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 부분의 European social dialogue 참여 주들의 2017년 합의('Just Energy Transition') 기업과 고용, 삶 의 조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 및 효과적 탈탄소화 위

		제기하면서 점진적 접근을 주장(IndustriAll내 입장)	한 계획, 정책, 투자 등의 조합. 독일 ver.di, 영국 UNISON, 캐나다 UNIFOR 등 유사 경향
국내사례	양대노총 내 제조업 및 비제조업(공공, 민간) 일부 산별연맹 노조	양대노총 내 다수의 제조 및 비제조업(공공, 민간) 산별연맹 내 의견그룹	민주노총, 금속, 공공 등 산별연맹 노조 및 의견 그룹

* 김종진(2021)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의 정책방향'에서 재인용.

○ 금속노조의 사례

2021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 및 협약>(안)	2021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산업전환 합의안>(2021)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산업전환과 산업융합·복합에 따른 사업재편 및 투자가 고용 불안을 야기하거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2. 교육·훈련: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경쟁력을 확보.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신기술 적용으로 노동 시간·강도·방식 및 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가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 4.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대응에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5. 공정거래 : 산업전환에 따른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원하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마련.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④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	--

- 2021년 금속노조가 산업전환에 있어 노사가 공동결정할 미래 계획의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 추진과 협약>(안)을 마련하였으나, 내부 다양한 의견 차이로 채택되지 못했고, 2021년 산업전환 협약안을 합의하였음.

2.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1) 더많은 시민교육과 사회적 논의 필요

- 조사보고서에 드러난 답변을 보면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기후위기 대응이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동반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불명료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답변들이 상당히 있음(예> PART C-23 ‘정부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 질문에 가장 높은 비중 답변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로 나옴(46%))
- 기후위기 문제를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도덕적·규범 영역으로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기후위기 대응에서 일상 속의 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임.

2) 권역별 세부 분석 후속작업 필요

- 조사대상 샘플링에 인천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할당이 이뤄졌고 조사분석에서도 권역별 분석이 포함되어 있음. 4개 권역은 1권역>계양구, 부평구/ 2권역>남동구, 연수구/ 3권역>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4권역> 서구로 구분되었음.
- 이중 인천의 기후·환경 관련 이슈가 집중된 지역은 주로 3권역(영흥화력 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부지 확보, 인천항, 인천공항 입지 등)과 4권역(수도권 매립지)이라 볼 수 있을 듯. 또한 3권역, 4권역에 원도심이 대거 포함되어 경제, 소득의 측면에서도 1권역, 2권역에 비해 인천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라 볼 수 있음.
- 전반적인 설문 응답 결과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 분석이 진행된다면 인천지역의 기후정책 대응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임.

3. 제정당들의 기후정책·공약에 대한 의견

1)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당의 역할 정립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노동자(노동조합), 시민단체, 기업, 정당, 정부, 지자체 등 각 주체들의 역할이 있음.
- 이중 정당의 역할은 ①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②시민, 노동자 등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대안화하거나 함께 투쟁에 나서고 ③정치(정부)를 압박하거나 시민, 노동자와 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 등일 것임,
- 이 세가지 역할은 서로 충돌하기가 다반사라 정당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할 것임.

2) 인천의 도시 특성, 기후 현안에 천착하는 정책과 공약 필요

- 인천은 인구와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 도시이고, 제조업 비중, 공항과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탄소다배출 요인이 많은 지역임.
- 이러한 지역적 조건 위에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이 수립되어야 함.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근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이슈가 결합되어 대응이 고민되는 추세. 마찬가지로 인천도 수도권 도시라는 인천의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기후대응 방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4. 정의로운 전환에서 노동운동의 요구

- 노동운동이 집중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제는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이고 가장 선발 과제로 자동차산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슈에 대응을 집중하고 있음. 인천은 한국지엠이라는 자동차 원청사가 존재하여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음.
- 산업전환은 기업 별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기업이나 노동자(노동조합) 모두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지역주민까지 포괄되어 논의되어 하는 의제.
- 따라서 노동운동의 정의로운 전환 대응에서 선결 조건은 ①실태 및 변화 과정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의 충분한 정보와 지식 ②산업/지역단위 등 초기업 단위 교섭/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조 ③ 실질적인 노조의 권한과 협상력임.
- 그러나 노조 조직률도 낮고 산별교섭 등 초기업 교섭이 제도화되지 않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구조가 역사적으로 정부와 자본의 이해 위주로 구조화되어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산업전환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

[참고]

EU 주요 회원국 온실가스배출량과 노사관계 현황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EU-28/OECD
인구(2019년, EU-28 및 노르웨이+아이슬란드)	5,800,000	5,500,000	83,000,000	360,000	5,300,000	10,200,000	519,160,000
1인당 실질 GDP(2019년)	49,190유로	37,170유로	35,980유로	38,840유로	69,890유로	43,840유로	28,630유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CO ₂ e, LULUCF 제외, 2017년)	8.6 t	10.1 t	11 t	14.1 t	10 t	5.3 t	8.5 t
온실가스 배출량(CO ₂ e, LULUCF 제외, 2017년)	49 mt	55 t	907 mt	5 mt	53 mt	53 mt	4,323 mt
1990년 대비 변화(LULUCF 제외, 2017년)	-30%	-22%	-28%	32%	3%	-26%	-23%
온실가스 순배출량(CO ₂ e, LULUCF 감축 반영, 2017년)	3 mt	-20 mt	-15 mt	9 mt	-25 mt	-44 mt	-258 mt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총비중(2018년)	36%	41%	16%	72%	73%	55%	18%
노동인구(20~64세 경제활동인구, 2019년)	2,766,000	2,567,000	41,231,000	186,000	2,596,000	5,094,000	238,515,000
단체교섭 적용률(2016년)	82%	89%	56%	92%	73%	90%	32%
노동조합 조직률(2018년)	67%	60%	17%	92%	49%	66%	해당없음

* 자료 : FES(2021) 원자료 :Eurostat 2019a, Eurostat 2019b, UNFCCC 2017, Eurostat 2018, Eurostat 2019c, OECD 2016, OECD 2018b).

<민주노총 4.10 총선요구안 중 기후위기 관련 요구>

기후정의, 산업정의 실현 노정 교섭, 정부·공공부문 역할 강화

(1) 정의로운 산업 전환 실현을 위한 노정 교섭

- 작업장단위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등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실현
- 초기업 교섭 보장 및 교섭의제 확장
- 산별 교섭 기구로서의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 노사 동수 참여, 노동자 대표 합의 없는 기업 위주 일방적 전환 지양.
 - 국가 노정 중앙 교섭, 기후정의위원회 등을 통한 연관 산업간 공동 대안 모색
-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국가 노정 중앙 교섭

(2) ‘전환’ 배제가 아닌 주도적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가장 우선적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 보장 거버넌스 구축

(3)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교통,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

○ 내연기관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 나아가 자동차 개인 소유를 억제하고 친환경 공공 대중 교통 체계의 확대

○ 발전 공기업들의 수평 통합, 민간 발전소들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 및 공영화

○ 정부 정책과 예산 수립 및 조달 정책에 있어서 기후영향평가 전면 도입

(4) 탄소 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 및 산업구조 전환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강화

○ 화석연료 기반 산업 전면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

○ 기후정의에 기반한 지속가능 산업구조 구축 및 순환경제 전환

[토론 4]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2024 기후정책 (환경 분야)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빠르게 기후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난개발로 생물다양성 파괴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시민들과 협의와 합의 되어진 정책들이 역행하고 있기에 정부와 기업들의 반환경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견인하며 기후시민이 요구하는 환경 분야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저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근거 마련
- 유희부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것에 국민의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023년 8월 정부는 심지어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빨리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만3400톤이 방류됐다. 2024년에는 총 7회에 걸쳐 7800톤씩, 약 5만4600톤을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고 이후 추가로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총 134만t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이다. 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되어 바다는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방사능 어류농축계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65%이상이 해양투기 반대했으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된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

○ 국토 난개발 저지 관련 정책

- 국립공원 내 개발 금지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개발자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을 막고 객관적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철회 요구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

경을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은 1970년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대부분 도시 과밀화로 이어진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과 과밀화를 막고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제도이다. 게다가, 탄소중립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 공간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km²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해제한 그린벨트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을 부추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확대

- 해양보호구역 적극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
-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대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 한강하구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추진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레기 저감 정책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는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확충하기로 약속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온실가스의 흡수와 저장을 위해서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의 보전이 중요하다.

○ 자원순환 정책의 역행을 먼저 되돌려 놓아야 한다

- 제로웨이스트·공유 용기 확대 및 활성화
 - 재사용,재활용 시장 활성화 및 일회성 택배 포장 규제 시행
 - 생산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 극대화
 - ‘1회용품 사용금지’ ‘1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 전국적으로 시행 요구
- 작년 9월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며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역행하고 있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11월 ‘1회용품 사용금지’도 연이어 포기하며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를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

한하는 환경부가 4월 3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를 유예시킨 것 또한 시행해야 한다.

○ 기후에너지 정책 추가 제언 (21대 국회에 촉구)

- 해상 풍력 에너지 체계 마련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 해양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해양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가 시급하다. 정부는 기후공약 발표에서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여야 정당,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어민, 기업 등 이해구성원이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입법 기회를 놓친다면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이 뒤쳐질 것이다

[토론 5]

도시농업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생태전환의 시민주체를 형성하자!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는 시급함, 절박함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근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깊은 공론의 장이 절실하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기후위기가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기도 하고, 끝없는 성장의 논리가 낳은 기후위기를 또 하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여기는 아이러니를 낳기도 하는 것 같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대전환에 대한 담론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각 정당의 득표를 위한 핵심공약과 정책이 개발과 성장에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기후위기와 대립되는 다른 공약을 분석해 볼 필요 또한 있다.

당장은 급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보겠지만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근본적인 대전환을 논의해야 한다. 바로 문명전환과 이에 따른 정치전환이 필요하다.

각 당의 기후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탄소배출의 문제는 많이 다루지만 탄소흡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는 것 같다. 자연적인 탄소흡수원은 해양과 토양, 산림과 식물일 수 있는데 탄소 흡수원을 보전하고, 늘리는 문제 또한 심도 깊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빠져있는 것 같다. 기후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체계와 제도, 정책 못지않게 생태적 전환의 삶을 추구하고, 기후정책의 지지자이며, 당사자인 기후시민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생태시민성, 생태주체성 형성에 대한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간접적인 의회주의,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정치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구현과 생태민주주의의 확장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생태전환의 시민주체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전환의 주체이기에, 기후위기 극복에서 탄소중립의 문제만큼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적 도시를 만드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문제이다.

또 한편에서는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정책의 비중이 적다라는 것도 지적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세계적인 토양학자들은 흙을 살려 대기의 탄소를 흡수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생태학 (Agroecology) :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의 생태학(The ecology of

sustainable food systems)에서는 지금의 산업형 농업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도시농업은 생태전환의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농사는 자연과 교감하여 생태감수성을 높이며, 생물종 다양성, 생태순환, 공동체의 문제들을 농(農)을 통하여 체험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주체(기후농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잠재적 주체(200만 명의 도시농부)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농부선언문은 도시농부와 공동체텃밭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별첨)

전환마을 운동의 중심에도 도시농부들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2005년 롭 흡킨스로 시작된 전환마을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운동¹⁾(3R (Resilience, Relocalisation, Regenerative Development)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환마을 운동은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와 먹거리 자립, 지역순환 경제 등을 표방하고 있다. (전환마을 남동선언 2024. 3. 23 예정)

기후정책과 관련하여 도시농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생태전환의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도시농업활성화를 공약화 하라는 것이다.

■ 우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한 도시농업 운동은 농사를 통해 공동체의 회복, 생태순환의 자립적 삶을 추구하며 2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으며, 2011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뤘고 있다.

도시농업법 시행 이후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텃밭 면적은 1.052ha(2022년 기준)에 이른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총가치가 5조 2,367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효과 3조1,090억원, 사회적효과 1조3,416억원, 환경적효과 7,861억원)²⁾

1) 토트네스 전환마을 주요 요소 3R (Resilience, Relocalisation, Regenerative Development)

- Resilience :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지역 시스템의 회복탄력성 강화
- Relocalisation : 재 지역화를 통해 석유 의존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
- Regenerative Development : 재생가능한 개발을 확대하여 석유와 같은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을 남겨두는 것

2)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 517억 원으로 총 3조 1,0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로 신체적 활동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 증진 4,211억 원, 가족관계 개선, 이웃 간 교

ipcc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2019) 5장에서는 “도시와 도시 근교농업은 도시의 식량안보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영향에 적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도시농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도시농업=주말농장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도시농업=주말농장”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다. 지자체의 도시농업관련 사업을 보면 주말농장, 상자텃밭 등 개인에게 분양하는 형태의 도시농업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말농장 모델은 도시농업 공간을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분양자(당첨자)에 폐쇄적으로 점유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도심 외곽의 공간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과밀화된 도심 속에서의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도시에서 공유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분양받은 자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점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화성시의 빌딩숲 텃밭정원³⁾은 도시의 텃밭이 공유 개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춰 볼거리, 즐길 거리, 교육과 체험, 아름다운 경관까지 제공하여, 새로운 접근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정책 확산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주말농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추진해왔던 지난 10여 년간 도시농업은

① 도시에 생명이 자라는 공간을 확대하며, 생태적 삶, 생태순환 시스템을 회복하는 활동을 통하여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 도시녹화를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대 : 옥상 등 인공지반 텃밭, 녹색커튼, 이끼활용
- 생물다양성 증진 : 꿀벌이 사는 생태도시(양봉), 토종(토종씨앗도서관), 먹거리 숲
- 유기자원의 순환 : 자가 퇴비 만들기, 지렁이상자 등

② 문화적 다양성을 담으며,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 형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 마을의 공동체 텃밭 : 자투리 텃밭, 주민참여 예산, 마을 만들기
-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텃밭

③ 도시농업의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영역의 일

류 증진에 따른 공동체 회복 1,455억 원,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문화적 가치 3,062억 원, 미래 세대에 제공하는 교육 증진 효과 4,688억 원으로 총 1조 3,416억 원으로 분석됐다.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는 생물 다양성 증진에 따른 생태적 가치 1,810억 원, 공기정화식물, 탄소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의한 환경정화 가치 1,854억 원, 옥상 녹화와 도시녹화 등 1,789억 원으로 총 7,86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 제7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당시 조성되었던 화성시 동탄 신도시 썬큰광장의 ‘빌딩숲 텃밭정원’은 70여명의 텃밭정원사가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는 개방공간의 텃밭정원으로 디자인과 작물 식재가 아름다운 볼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텃밭정원사에게도 모두 좋은 반응을 만들어낸 좋은 사례다.

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사회적 경제조직 : 텃밭교육, 적정기술, 자원순환 분야, 텃밭조성, 도시양봉
- 일자리 창출 : 텃밭강사, 도시농업관리사, 공공텃밭 코디네이터

④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도시농업은 소외된 삶을 벗어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삶의 질 향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텃밭 교실 : 영유아 생태텃밭교실, 학교텃밭
- 건강과 치유 : 복지와 연계한 텃밭활동, 장애인 텃밭, 독거노인 반려식물보급사업, 치유농업
- 평생교육 : 도시농부학교, 도시농업전문가과정

⑤ 먹거리의 생산, 유통과 소비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히며, 먹거리로 부터의 소외를 줄여가는 역할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 도시형 농부시장 : 도시농부, 농민, 시민이 함께하는 대화하는 시장
- 도농상생 : 상생상회, 푸드어셈블리
- 마을부역(공유부역) : 먹거리로 부터의 소외 해소 (다문화가족, 아동, 독거노인, 청년밥상)

이렇듯 지난 10여 년간의 도시농업은 기후위기사대 탄소중립과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적 도시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책제안) 개방, 공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인천형 공동체텃밭의 조성 운영하여 생태전환의 시민주체를 양성하자

도시농업 공간은 ①유쾌한 공간 ②문화적 공간 ③포용적 공간 ④회복의 공간 ⑤민주적 공간 ⑥탄력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춰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실천,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의 강화와 시민주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송도이음텃밭의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의 R-Urban AgroCité⁴⁾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나머지 정책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안했던 전환사회 시민행동의 정책제안(2022. 5. 16) 중 먹거리 분야 정책제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아그로씨테는 ‘공공 공간의 사유화에 맞서는 공유제’이자 ‘협동하는 도시 사회가 성숙하는 곳’이라고 선언하는 곳으로, 텃밭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고, 재이용하고, 수리하며 개조하는 실험 공간’이라고 선언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R-Urban은 지역 생산과 지역 순환 유통, 자원 재생, 생태 주택 자가 건축과 협동 주택, 도시 농업 등 지역의 생태적 순환 경제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이다.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도시 환경과 지역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협력적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유럽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R-Urban은 유럽 여러 나라에 걸쳐 5개 도시에서 6곳의 허브를 개발했고, 60여 공공 및 시민 단체와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관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도시 농장 아그로씨테이다.

먹거리 주권 도시 인천

□ 제안 배경

환경특별시를 넘어 생태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먹거리 주권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천의 농어업인구는 2019년 기준 27,09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 미만이다. 면적으로는 강화군, 옹진군이 전체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농지는 17,083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 친환경농업 농지는 558ha로 지역 먹거리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5.2%를 밑도는 수준이다. 친환경 농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강화·옹진(서해5도 포함) 지역과 도심외곽의 지역 농업을 생태농업 시범지구화하고 도심과 연계한 로컬푸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인천은 전국최대 규모의 인천e음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로컬푸드 체계 구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 체험을 넘어 생태적인 시민의 양성과 도시의 녹색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도시텃밭은 도시민의 올바른 먹거리 의식 형성, 시민참여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전환, 지역공동체 형성, 생태시민교육, 치유와 돌봄, 도심녹지 확대, 다양한 생태계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도시텃밭은 단순 주말농장방식이 아니라 생태적인 공동체형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의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중심의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가 필요하며, 먹거리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는 주민공유부역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제안 정책

1. 생태순환형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인천이음 먹거리 직구 지원
 - 인천형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인천e음 활용(인천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구축 등)
 - 공공급식(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지역 친환경 먹거리 의무화 및 채식 선택제 시행
2. 강화군·옹진군 생태농업 시범단지화
2030년까지 유기농업농지 30%확보 및 지원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축산·양식부문 항생제 50% 감축)

3. 인천형 공동체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지원 확대

-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송도이음텃밭) 구별 확대 시행
- 도시농업지원센터 구별 설치 및 지원(현재 미추홀구와 남동구 운영 중)

4. 공유부역 지원

- 공동체 공유부역 구별 시범 설치 및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
(경기도 공유부역 설치운영 지원사업, 대전 마을부역 지원사업 운영 중)

도시농부 선언문

대도시를 중심으로 온 나라에 퍼지는 도시농업은 사람들의 경작본능을 일깨우며 확산되고 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도시농부들은 도시농업 운동의 출발에서부터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시농부는

- 회색의 콘크리트와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생명이 자라는 녹색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 단절된 세대와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텃밭을 만들어 간다.
- 버려지는 유기자원을 이용한 자원순환 퇴비 만들기, 빗물의 이용,
-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 꿀벌을 기르며, 풀과 곤충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의 미래를 일군다.
- 텃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며, 농부학교를 통해 시민교육의 장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도시농부들의 실험과 도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 텃밭은

- 문화적, 사회적, 세대 간 다양성을 담고 이웃이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 자연체험, 생물다양성, 식량주권과 토종종자 보전의 공간이다.
- 도시와 농촌 농업을 잇는 다리이다.
- 자연과 공생하는 인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정한 가격, 친환경
-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 환경교육, 공동학습, 교환, 공유의 장소이며,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더 많은 공동체 텃밭, 더 많은 경작 공간, 더 많은 도시농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가 자라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가 싹트며, 인류의 근본인 먹거리와 농(農)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희망의 씨앗인 이 텃밭들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도시가 우리의 텃밭이다. 도시를 경작하자!

2016. 4. 11 도시농업의 날 기념

[토론 6]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주민의 에너지 연결하기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실험실

선언과 계획뿐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기후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진 만큼 기업과 행정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선언적이거나 계획만 있을 뿐 그 계획을 실행할 예산, 인력, 세부추진계획과 단계적 성과목표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과 분리수거 등 일상 속 실천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도 하지 않으면서 강원도 삼척에 또다른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한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업체에서 한꺼번에 다 섞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의 실천노력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 인천시도 ‘2045 탄소중립 실현,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4대 정책방향, 15대 과제를 설정하고 204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0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예산, 인력, 시스템, 세부추진계획을 통한 달성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본조례와, 기후에너지 대응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그것도 인력과 예산이 배치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아니며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당위적 계획인 경우가 많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에너지전환을 꿈꾸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로

기후위기가 인간의 과도한 개발과 탐욕때문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가능하다. 온실가스발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 물론 산업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북극곰을 걱정하며 플러그를 뽑고 대기전력을 줄이는 실천하는 개인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절전소, 아파트절전소, 교회절전소, 마을절전소 등 시민들이 개인의 실천을 나누고 공동의 노력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과 기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절전소를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개인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의 시스템과 정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주민참여햇빛발전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익공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을 기다리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햇빛발전을 하는 협동조합이 인천에서도 각 구별로 결성되었다.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지원과 주민참여햇빛발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여전히 공공부지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베란다(옥상)태양광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과 일상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에너지 생산자의 경험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학교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직접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저감효과 뿐 아니라 태양광시설을 교과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발전소의 예시처럼 학교의 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이익을 장학금이나 지역사회에 기부한다면 더욱더 의미있는 발전소가 될 것이다.

주차장 태양광은 유휴 부지이고 이미 개발된 땅이기 때문에 생태계 문제나 주민 충돌 문제가 적으며 눈이나 비로부터 차량 보호 역할을 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전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2년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국제공항으로 21,20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천 지역 상위 10대 주차장을 활용하면 총 41,536kW 태양광 발전을 설치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단지태양광은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을 하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같아 온실가스절감과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생태환경 훼손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이나 입지 갈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산업단지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산단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조속히 도입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운영도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을 진행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운영에 따른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 뿐 아니라 인천지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주민참여를 비롯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온실가스는 건물, 수송, 교통, 에너지, 흡수원, 농축산,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어 담당하는 행정의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중앙정부의 뿐 아니라 지자체, 구단위, 마을단위 탄소중립 관련한 정책수립과 진행이 필요하다. 계양구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경제 과에 배당되어있고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있어 두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여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과 홍보,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홍보와 꾸준한 참여를 통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전달의 홍보와 인식개선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생태,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에너지 전환 행정시스템을 구성하여 지자체 장이나 정당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해야한다.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정책역량강화

주민들에게 행정은 내 집앞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행정은 주민들이 행정의 정책에 동원되거나 계몽대상이 되기도 한다. 결국 지역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계획과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필요하며 그 역량을 쌓기 위한 중간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너지 전환 문제와 시민들이 일상과 마을에서 피부로 와닿는 자원순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이다. 광역시 단위가 아니라 최소 군단위, 나아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해결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분	구 분	세부 활동내역
지역 에너지 전환	주민참여 지원사업	- 에너지 절전소와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햇빛발전소) 육성과 지원 -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과 진단 실행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역에너지 전환정책	- 에너지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 - 에너지 관련한 통계와 정보 제공
	지역에너지 시스템구축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리빙랩 진행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	주민참여 지원사업	- 제로웨이스트 샵과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 마을형 자원순환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 자원순환주민리더 양성과 일자리 창출
	자원순환 전환정책	- 자원순환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 - 자원순환 관련한 통계와 정보 제공
	자원순환 시스템구축	- 분리배출·수거체계 효율화로 폐자원 회수율 증대 -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리빙랩 진행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전환의 힘 - ‘주민의 참여’

많은 전문가들이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햇빛발전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와 전기 문제는 바쁜 현대의 일상을 사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먼 이야기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조례나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와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장이 바뀌면 그동안 잘 진행되고 발전되어 가던 정책이 사라지기도 한다.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며 정책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분배하는 공모사업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마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주민들을 발견, 연결, 성장시켜야 한다. 지역의 교수, 관련공무원, 환경단체로 구성된 기존의 의사결정구조를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그 권한을 넘기고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과 실행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꼭 행정과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후정치와 기후유권자를 이야기하는 환경진영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가는 힘은 결국 주민의 참여임을 생각하며 총선시기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현장에서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토론 7]

기후위기비상행동의 22대 총선 정책 요구안 그리고 총선 이후의 계획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

○ 기후위기비상행동의 22대 총선 정책 요구

- 기후정의·녹색 전환 국가 비전 마련
 - 토건·개발 중심, 대량생산·대량 소비 중심 체제는 현재의 기후위기를 낳은 주요 원인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그간 인류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음이며, 또 다른 기후 불평등과 차별을 낳는 원인이 될 것임
 - 이에 기후정의 관점과 지구위험한계선을 고려한 대한민국 헌법부터 경제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2대 국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함.
-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 구제
 -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함. 정의로운 전환 원칙은 관련 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으로 확대되어 왔고, 점차 인권과 젠더적 시각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확대시켜야 함.
 -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극단적으로 치닫는 재난과 농산물 피해, 노동조건 악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함.
- 생태적 삶 촉진 제도 도입
 - 현재의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만으로 극복될 수 없음.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임
 - 기존의 사회 체제를 바꾸는 일은 결국 기존 생태파괴적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일로 연결될 것이며,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체제 전환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 함.

1. 기후정의·녹색 전환 국가 비전 마련

1) 기후·생태 헌법 개정안 추진

- 최근 10여년 동안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수차례 나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헌법 규정에 대한 논의는 풍부히 진행되지 못했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을 규정한 기존 헌법 (제35조)의 한계는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음.
- 특히 헌법 정신과 국민의 권리에 기후·생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해결에 적합한 정치 제도와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2)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 : NDC 재설정, 녹색성장 조항 삭제 등

- 2022년 3월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녹색성장 개념이 남아 있고 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무, 정의로운 전환 방안 등의 부실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2025년까지 차기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의무가 있음

3) 성장지상주의 탈피 : 경제정책 GDP 대체 지표 도입,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대규모 토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중단

-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 지표 개발 공론화
-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도입 방안 마련 및 지자체 단위 시행 필요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중단, 그리고 해당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4) 전환 촉진 패키지 법안 제정 : 탈석탄, 탈핵, 공공재생에너지, 공항

- 탈석탄법, 탈핵법,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촉진법 제·개정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감축, 조기 폐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 석탄을 비롯한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 공공기금의 해외 석탄 채굴, 발전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
 - 석탄광산, 발전소, 연탄 사용 중단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법률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규제를 강화하고, 폐쇄를 촉진하는 법률
 -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법률
 -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는 법률
- 국제 공항 쿼터제, 항공세 신설

- 국내 공항 증설 금지, 국제 공항 쿼터제 시행
- 국내외 항공 이용자들에 대한 항공세 신설.

5)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국회 개편

-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기재부와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산업부, 토건공사를 추진하는 국토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기후위기 전담 부서 필요성 공론화 작업과 정부조직개편법안 마련
-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입법권·예산심의권을 갖춘 기후위기 상설 상임위 구성

2.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 구제

1)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을 확대 방안이 필요함.
- 기존 탄소배출 사업장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과정의 광범위한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농업·난방연료 전환 등 다양한 전환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대

2) 기후정의 조세제도 추진을 통한 자원 확보

-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비용 부담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부유층·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해 기존 국방비와 토건 예산을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고 에너지,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이 필요

3) 식량자급률·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생태전환 촉진

- 농업부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아직 요원한 상태임. 농업 부문 연료, 농자재, 운송·보관 등 전 분야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식량 자급률·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 전과정 평가를 통한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대응 방안 마련

4) 녹색일자리 개념 확대 및 양적·질적 확장 : ‘국민기후일자리 제도’ 신설, 돌봄 노동을 녹색일자리로 확대

- 녹색 일자리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일자리’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후 회복력 등을 고려할 때 돌봄 노동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일자리로 확대되어야 함
- ‘국민 기후일자리제도’ 공동 설계 및 제안
- 돌봄 노동을 포함한 녹색 일자리 개념 확대 방안 마련

5) 기후 생존권 : 기후재난 작업 중지의무·농작물 피해구제·기후방재 강화

- 기후재난 작업 중지의무 법제화,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폭염·혹한 방재대책 마련
- 기후위기 농작물 피해 구제법 제정
- 오송참사 국정 조사 실시 및 진상 규명

3. 생태적 삶 촉진 제도 도입

1) 노동시간 단축·에너지 휴가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에너지 휴가제 도입에 따른 국내 온실가스 감축 공동 조사
- 노동시간 단축·에너지 휴가제 도입 캠페인 및 제도 마련

2) ‘자가용 필요 없는 생활’ 촉진 : 무상교통·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확산

- ‘자가용 필요 없는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 : 자동차없는 가구에 대한 우선 무상교통·전기차 이외의 교통수단 지원금 등
- 인구소멸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모델 개발 및 공론화

3) 먹거리 정책 : 채식 선택권 및 지원 정책 강화, 푸드 마일리지 목표 설정

-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강화 법제화 및 지원정책 추진
- 식품 시스템(푸드마일리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설정 추진

4) 1회 용품 생산·소비 규제 정책

- 정부의 1회 용품 생산·소비 규제 정책 후퇴에 대한 공동 대응
- 2024년 11월, UN 플라스틱 협약 공동 대응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22대 총선 이후 계획

- 기후유권자 정치세력화의 시작

- 토론회·기후유권자대회: 공약·정책 제안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
- 총선 이후 인천 기후시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작
- 주요 정당과 지역구 주요 후보에게 기후공약 전달 및 요구
- 후보 확정 이후 정당·지역구 주요 후보 공약 분석 인천 유권자에 전달
- 기후공약 이행 모니터링, 공약 이행과정 검증 및 분석 결과 발표
- * 기후위기비상행동: 유권자 1.5% (66만명) 을 목표로 ‘기후정치 씨앗’ 모집 계획

• 인천 기후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캠페인

- 인천시 정책 모니터링, 인천시 기후정책 대응
- 노동자·지역주민·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후시민 조직
-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민의 등장

•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 2030년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기
- 영흥화력 1,2호기 폐쇄의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는 상황, ‘조기폐쇄 연대’가 필요
- 기후위기, 탈석탄, 미세먼지 문제제기를 통해 인천 탄소중립을 앞당길 여론 형성
- 탈석탄 이후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및 제안
- 인천, 2045년 탄소중립 선언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정의로운 전환 지구 지정이나 지원센터, 기금 등에 대한 내용도 미비(조례 개정 및 기금 신설을 통한 영흥화력 정의로운 전환의 동력 마련)
- 지역 고용정책과 영흥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연계,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녹색 전환 모델 마련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이해당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대안

- 전국·인천 의제 존재, 이를 뒷받침할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의 한계
- 기후운동의 확산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단체·시민의 참여 보장